



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정책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번역

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정책

이 보고서는 OECD와의 협의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OECD 공식 번역본은 아닙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원 저작물과 번역본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원본 저작물만 유효하다고 간주됩니다.

본 저작물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의견과 주장이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다.

제시된 모든 자료와 지도 그리고 본 보고서는 그 어떤 영토의 지위 또는 주권도 침해하지 않으며, 국경 및 경계, 영토나 도시 또는 지역의 명칭을 바꾸지 않는다.

OECD 에서 발간된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National Urban Policy in OECD Countries ©2017 OECD

©2018 OECD/KOREA Policy Centre 한국어 번역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공급된다. OECD 가 제공한 이러한 자료의 사용은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진 제공자: 표지©Jeffrey Fisher

OECD 출판물의 정오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

서문

세계적 추세인 급격한 도시화는 정부가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을 발전시킬 기회를 창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도시개발정책 체계는 국내 및 국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정부수준간 및 정책분야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복지손실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만 도시개발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국가도시정책(NUP)은 도시개발체계의 핵심요소다. NUP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제3차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유엔회의(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합의된 문서인 '새로운 도시의제'와 같은 중요한 국제협약에서도 발견된다. 실제로 NUP는 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의 준비과정에서 10개의 정책주제에 포함되었다. '새로운 도시의제'에는 근본적인 변화동인의 하나로서 지역-국가 제휴를 기반으로 하는 NUP가 제시되어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NUP를 평가할 방법과 NUP를 설계, 실행, 감시 및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파악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서 NUP의 역할과 관행을 조사함으로써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성적 자료를 활용하여 NUP의 단계, 범위 및 부문 등의 본질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담당기관은 물론, 과제와 기회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체계적인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면 NUP개발과 관련된 결론과 모범 사례를 도출할 수 있다. 본 간행물은 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위한 준비자료로 작성되었으며 기존의 유엔인간정주계획(UN Habitat)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엔인간정주계획과 OECD는 새로운 도시의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도시정책파트3를 공동으로 주도함에 따라 본 보고서를 구상하였다.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는 유엔인간정주계획과 OECD가 공동으로 작성한 세계 국가도시정책 보고서와 함께 국제사회의 국가도시정책감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감사의 말

JoaquimOliveira Martins가 이끄는 지역발전정책부가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업, 중소기업, 지역발전, 관광센터가 발간하였다. RudigerAhrend와 Tadashi Matsumoto가 본 보고서 작성을 감독하고 조정하였다. Alexis Gensberg Robert와 AndresSanabria가 초안을 작성하였다.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와 OECD 도시정책 실무단의 각국 대표들은 본 보고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크게 기여해주었다.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Emiko Araki, Claire Charbit, SeongkyunCho, Thea Chubinidze, Jeanette Duboys, Daniela Glocker, OscarHuerta-Melchor, Tamara Krawchenko, Karen Maguire와 Chris McDonald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본 보고서는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이 국가도시정책에 관한 유엔인간정주계획 지역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행한 국가도시정책에 관한 이전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저자들은 OECD의 분석작업에 기여한 유엔인간정주계획의 Jane Reid와 Remy Sietchiping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 및 채택된 논쟁은 유엔인간정주계획, OECD 또는 OECD 회원국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목차

약어.....	7
개요.....	8
제 1 장 국가도시정책개론	9
서론	10
방법론	10
주요조사결과	11
참고문헌.....	15
제 2 장 국가별현황	16
오스트레일리아.....	17
오스트리아	20
벨기에	23
캐나다	26
칠레	29
체코	32
덴마크	35
에스토니아	38
핀란드	41
프랑스	44
독일	47
그리스	50
헝가리	52
아이슬란드	54
아일랜드.....	55
이스라엘.....	58
이탈리아.....	62
일본	64
한국	66
라트비아.....	68
룩셈부르크	71
멕시코	74
네덜란드.....	76
뉴질랜드.....	78
노르웨이.....	81
폴란드	83

6 - 목차

포르투갈	86
슬로바키아	89
슬로베니아	90
스페인	93
스웨덴	95
스위스	97
터키	100
영국	103
미국	106

그림

그림 1.1. 35 개 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 정책유형	12
그림 1.2. 35 개 OECD 회원국의 발전단계별 국가도시정책	13
그림 1.3. 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정책 중점분야	13
그림 1.4. 35 개 OECD 회원국의 도시정책 담당기관유형	14

약어

Habitat III	제3차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NUP	국가도시정책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UN-Habitat	유엔인간정주계획

개요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도시정책(NUP)이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이 좋은 도시개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정부가 여러 주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일관된 결정들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도시정책을 국가 및 국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화의 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정책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도시정책은 지방도시정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방도시정책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창출하게 한다.

이 보고서에는 35개 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정책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평가결과를 담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아직은 좀 더 국가도시정책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15개 국가만 명시적인 국가도시정책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90%에 달하는 OECD 회원국은 국가도시정책 요소의 일부가 이미 준비된 상태로 앞으로 이들 정책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를 갖고 있다.

명시적인 국가도시정책을 마련한 OECD 회원국 대다수는 아직도 정책사이클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33%의 국가는 형성단계에, 또 다른 33%는 실행단계에 있다. 4개 국가만이 감시 및 평가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국가도시정책과정을 강화하려는 국가에게 유용할 것이다.

OECD 회원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국가도시정책부문은 경제개발이고(19개 국가의 국가도시정책에 존재), 기후변화대응과 인간개발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는 도시정책 전담기관이 없다. 대신에 국가계획 담당기관에서 도시정책도 담당한다. 국가도시정책은 주로 여러 부처에서 조정을 거쳐 개발, 실행, 감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부처간 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는 정책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이 국가도시정책 진행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OECD 회원국 중 다수는 국가도시정책 창출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참여형 접근법을 적용해왔다.

간단히 말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국가 수준에서 적어도 몇몇 유형의 도시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국가도시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명시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국가도시정책의 진척결과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및 기후변화협약 같은 국제협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신도시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제 1 장

국가도시정책 개론

본 장에서는 OECD 회원국들의 국가도시정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회원국들의 국가도시정책(NUP) 개발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NUP의 정의, 분류 및 단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 다음 각국에서 수집한 자료에서 찾은 주요 조사결과를 기술하며, OECD 회원국들의 NUP 관행을 요약한다.

서론

새로운 도시의제와 기타 세계적인 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도시정책(NUP)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NUP 감시 및 평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각국의 도시와 제도의 조건을 고려해 NUP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틀이 존재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는 각 OECD 회원국 NUP 절차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려는 첫 시도이다. 도시와 관련된 난제와 기회의 전후 사정이 다르고 담당기관도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정성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NUP 개발에 관한 교훈과 모범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각국의 정책단계와 실행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이 다루는 부문과 구체적인 문제를 비교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방법론

본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와 OECD 도시정책 실무단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다. OECD는 회원국이 제출한 문헌과 예비자료를 토대로 1차 평가를 수행하였다. 회원국들은 1차 평가를 검토하여 기술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NUP의 정의

본 보고서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이 좋은 도시개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정부가 여러 주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일관된 결정들”이라고 하는 유엔인간정주계획(유엔인간정주계획, 2014)의 NUP 정의를 적용한다.

NUP의 분류

NUP 평가는 각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명시적 또는 부분적 NUP의 분류는 유엔인간정주계획의 선행연구에 근거를 둔다. **명시적 NUP**는 정책의 명칭이 ‘국가도시정책’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도시화정책’, ‘국가 도시전략’ 또는 ‘국가 도시개발전략’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며, **부분적 NUP**는 NUP의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공식적인 NUP로 확립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7년 간행). 이러한 구분은 명확한 차이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개념적이고 조직적일지도 모르지만 NUP를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는지를 검토하는 데는 유용하다. NUP가 명시적일수록 국가 수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의 일관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NUP부재”는 국가의 도시정책 분야에서 NUP시행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다.

부차적/선행 정책

본 보고서는 정부가 도시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한 선행 정책 또는 부차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 정책은 정부가 이전에 시행했던 정책으로 주로 NUP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차적 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 도시문제를 다루는 부차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NUP의 단계

본 보고서는 NUP 과정의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단계는 “진단”, “형성”, “실행”, “감시 및 평가” 및 “해당 없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진단”은 첫째 단계로 국가가 NUP를 만들기 위한 예비분석을 수행하는 시기를 지칭한다. “형성”과정에서 초안이 만들어지며 “실행”은 정책의 시행을 뜻하는 용어다. 마지막 단계인 “감시 및 평가”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점이다. “해당 없음”은 NUP를 실행하지 않는 국가에 적용된다.

NUP의 범위

OECD는 본 보고서에서 경제개발, 공간개발, 인간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NUP의 범위도 평가했다(Dodson, J. 외, 2017년 간행). 이런 범주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루어 왔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일련의 난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는 “광범위함”, “적당함”, “저조함” 및 “정보 불충분”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광범위함”은 정부의 정책수행의지가 확고하고 목표, 논리 및 세부방침 등으로 NUP 정책에 그 의지가 반영된 경우다. “적당함”은 정책언명과 목표는 존재하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명확한 실행계획이 없는 경우다. “저조함”은 구체적인 분야를 다루는 정책이 없거나 중요한 NUP와는 무관한 부문별 정책만 존재하는 경우다. “정보 불충분”은 본 연구의 완료시점에 정책관련 정보가 불충분하여 추가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다.

제도적 환경

NUP가 성공을 거두려면 국가 수준에서 명백하게 인식된 도시정책 환경뿐만 아니라 NUP를 주도하고 조정할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엔인간정주계획이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NUP를 실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당국의 존재여부를 평가하고 국가도시정책 담당기관을 “전문 도시정책기관”, “일반 국가계획기관” 및 “지방계획기관”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7년 간행). 국가 수준에서 도시화를 감독하는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의 존재는 NUP과정을 주도할 국가의 제도적 역량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전문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개발 및 계획을 감독하는 국가계획기관이 광범위한 다른 정책 분야의 일부로서 NUP를 실행할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환경에서는 충분한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계획기관이 NUP 실행을 담당하는 국가도 있다. 본 보고서는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접근방법의 유형

본 보고서는 NUP를 창출하기 위해 적용한 접근방법의 유형도 게재하며, NUP의 개발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수준도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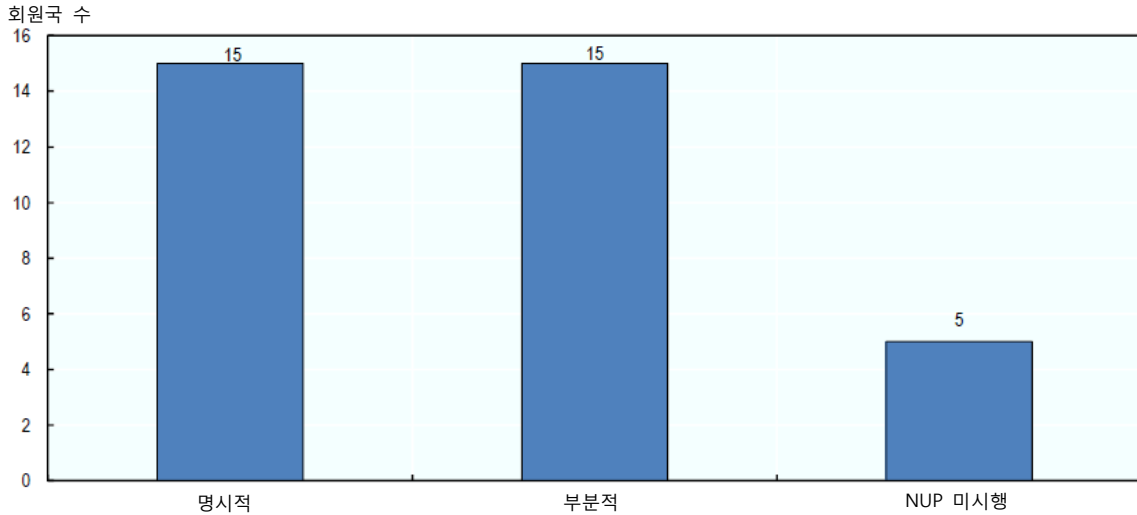
주요 조사결과

- 35개 OECD 회원국 중에서 15개국만이 명시적 NUP를 실행하고 있었으며 그 중 3분의 1이 아직 형성단계에 머물러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OECD 회원국의 90%

이상이 NUP 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 5개 회원국이 도시정책 분야에 NUP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림1.1. 35개 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정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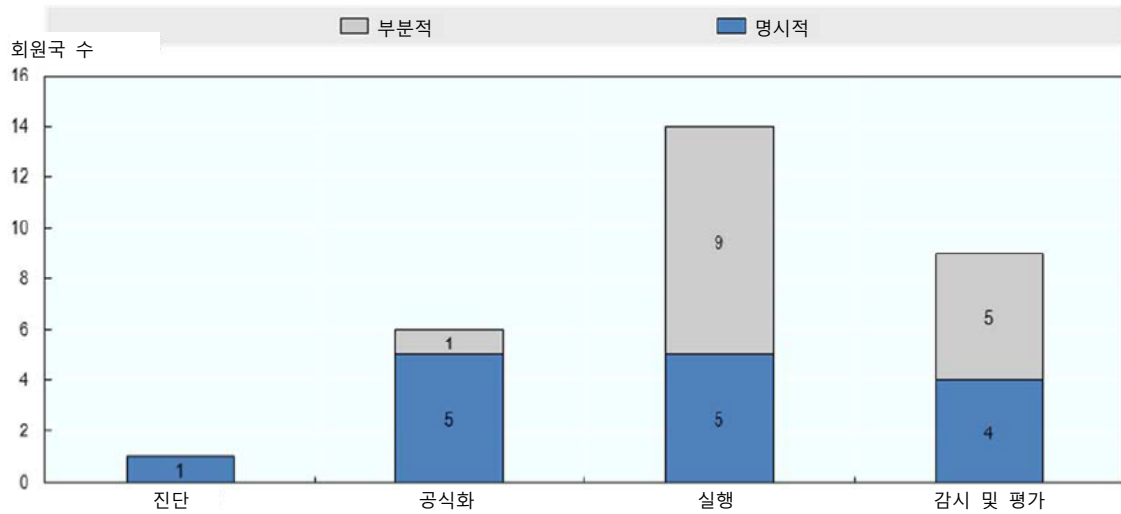


출처: OECD(2016a), "국가도시정책에 관한 OECD 조사", 미발간

NUP의 발전단계

- 명시적 NUP를 실행하고 있는 15개 회원국의 33%가 형성단계에 있으며 유사한 비율의 회원국이 실행단계에 있다.
- 14개 회원국(전체 OECD 회원국의 40%에 해당)이 명시적 NUP나 부분적 NUP의 실행단계에 있다. 이중 9개 회원국이 부분적 NUP를, 5개국이 명시적 NUP를 보유하고 있다.
- 다음으로 비중이 큰 단계는 감시 및 평가로서 9개 OECD 회원국(26%)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회원국의 과반수(5개 회원국)가 부분적 NUP를 시행하고 있다.
- 형성단계에 있는 회원국은 6개로 그 중 5개 회원국이 명시적 NUP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1.2. 35개 OECD 회원국의 발전단계별 국가도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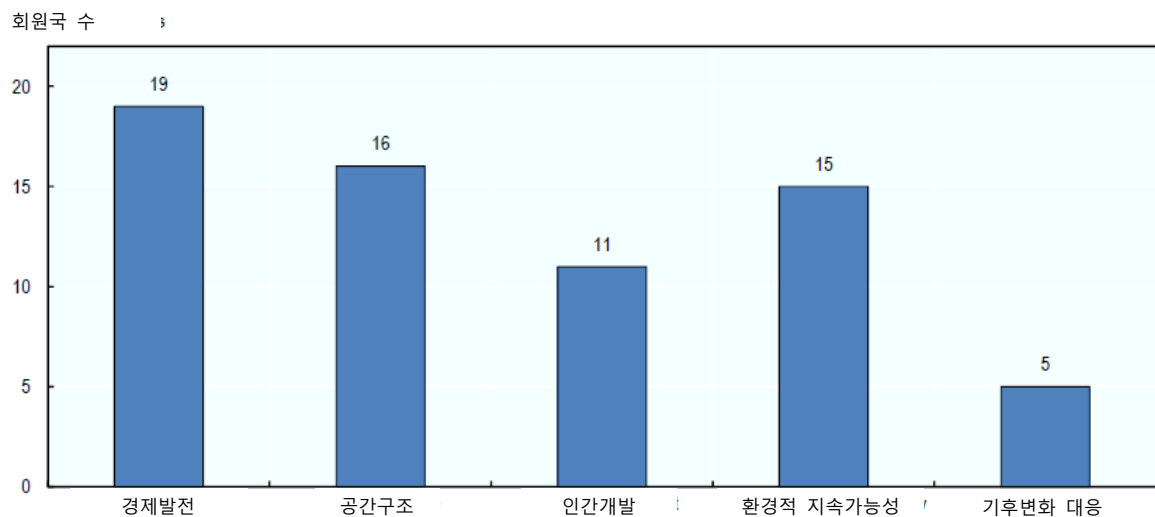


출처: OECD(2016a), "국가도시정책에 관한 OECD 조사", 미발간

NUP의 범위

- OECD 회원국에서 NUP가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부문은 경제발전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원국의 54%가 이 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5개 회원국만이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루므로써 가장 낮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특히 개선할 여지가 많은 분야로 밝혀졌다.

그림1.3. 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정책 중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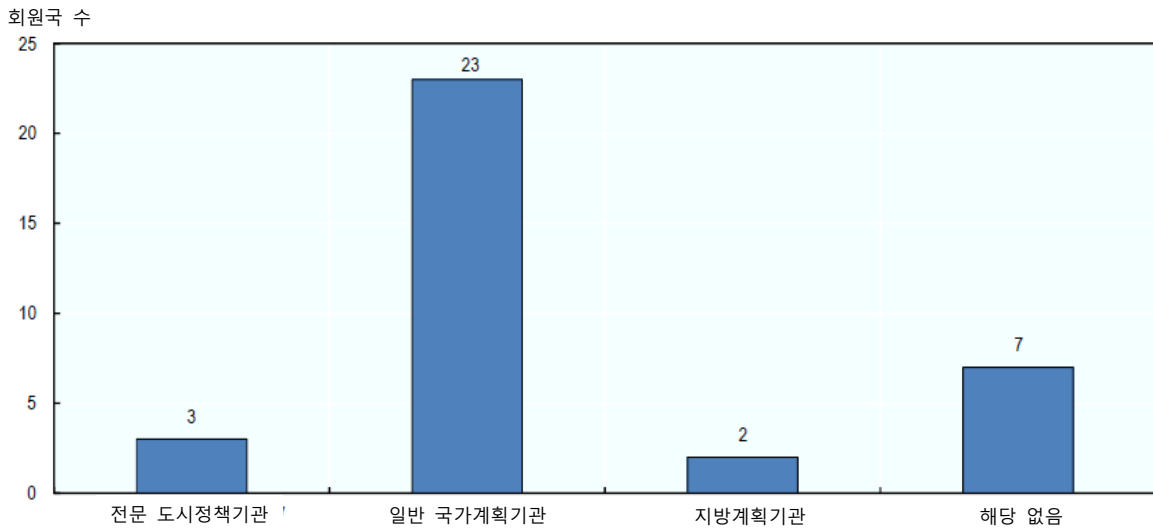


출처: OECD(2016a), "국가도시정책에 관한 OECD 조사", 미발간

기타 조사결과

- 대부분의 회원국은 NUP 실행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도시정책 기관이 없으나, 정책을 감시하는 일반 국가계획기관은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NUP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조정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림1.4. 35개 OECD 회원국의 도시정책 담당기관 유형



출처: OECD(2016a), "국가도시정책에 관한 OECD 조사", 미발간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NUP 개발과정에 참여시키는 참여형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NUP는 전 부문에 걸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정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활발하게 NUP를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도시의제 실행에 기여하기 위해 과정을 촉진시키고 범위를 넓히려려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의 첫 NUP 실태평가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NUP의 범주와 제도적 환경을 더욱 다양화하는 것이 NUP 정책 감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정책개발을 위한 참여형 접근법과 NUP의 감시 및 평가 지표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Cities Alliance(2014), *Evolution of National Urban Policy – A Global Overview*,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Nairobi.
- Dodson, J. et al.(2017, forthcoming), *The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prepared for UN-Habitat, April 2016, draft.
- OECD (2016b), *OECD Economic Outlook 2016: Productive Regions for Inclusive Socie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0245-en>.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unpublished.
- UN-Habitat (2014), *The Evolution of National Urban Policies*.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Nairobi.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 United Nations(2016), *Habitat III- Policy Paper Framework 3- National Urban Policy*,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Nairobi.

제 2 장

국가별 현황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이 그 책임하에 제공한다. OECD가 동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국제법에 따른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지위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스마트 도시계획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6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수상 및 내각부가작성한 계획초안
선행/부차적 정책	우리의 도시, 우리의 미래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살기 좋은 미래를위한 국가도시정책, 2011
발전 단계	공식화 - 2016년 5-6월 연방선거 중 보류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참여 과정: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2016년5월에 계획 토의를 위한 스마트 도시 정상회담 개최
실행 기관	수상 및 내각부
정부 체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해당 없음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도시 협정, 투자

현행 국가도시정책

2016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은 *스마트 도시계획*으로 명명된 새로운 국가도시정책을 제시하였다. 수상 직속 도시 및 디지털 전환 담당 차관보가 입안한 계획은 수상 및 내각부의 소관으로 지정되었다. *스마트 도시계획*의 목적은 중소 지방도시를 포함한 국내 대도시의 계획 및 투자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스마트한 투자.** 가치확보, 사회기반시설 재원조달 단위, 5천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AUD)에 이르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공약 등의 재원조달 메커니즘 강조.
2. **스마트한 정책.** 영국의 사례와 유사한 "도시 협정", 규제개혁(도시 수준에서의 정부 분절화 감소 포함) 및 도시 수준에서의 자료수집 개선안 제의.
3. **스마트한 기술.** 혁신기술, 개방적인 실시간 데이터, 에너지 효율 혁신에 주력(오스트레일리아 연방, 2016).

*스마트 도시계획*의 주목할만한 측면은 실행, 특히 투자재원 조달에 민간부문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계획을 8주간(2016년 6월 종료)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일반대중의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 2016).

*스마트 도시계획*의 발표로 도시계획 분야는 2016년 2월에 수상 및 내각부의 수상 직속 도시 및 디지털 전환 담당 차관보로 이관되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도시계획 분야는 환경부 내 도시 및 건물환경 장관의 소관이였다(Taylor, 2016).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오스트레일리아의 선행 국가도시계획은 2011년 사회기반시설 및 교통부에 의해 공식화된 '우리의 도시, 우리의 미래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살기 좋은 미래를 위한 국가도시정책'이었다. 동 정책은 형성단계에 그쳤고 실행되지는 않았다(Dodson, J. 외, 2017년 간행). 도시교통전략(2013)은 오스트레일리아 도시의 교통시설 수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OECD, 2014).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스마트 도시계획 2016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저조함
인간개발	저조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2016년 스마트 도시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X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 Commonwealth of Australia(2016), Smart Cities Plan, Commonwealth of Australia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https://cities.dpmc.gov.au/smart-cities-plan>(accessed 26 May 2016).
- Dodson, J. et al. (2017, forthcoming), *The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prepared for UN-Habitat, April 2016, draft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Australia", unpublished.
- OECD (2014), *OECD Regional Outlook: Regions and Cities: Where Policies and People Mee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415-en>.
- Taylor, L. (2016), "\$50m 'investment-banking style' unit to fund transport projects", in *The Guardian*, 28 April 2016, Guardian News and Media Limited, London, United Kingdom, 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6/apr/29/50bn-investment-bankingstyle-unit-to-fund-transport-projects(accessed 26 May 2016).

오스트리아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오스트리아 공간개발 구상(ÖREK 2011)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1-2020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자발적인 전략계획기구
선행/부차적 정책	지역도시 재생계획, 집적 정책의 공식화, 통합 수송서비스 및 교통시스템 실행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시 정부 수준의 구성원 참여 과정
실행 기관	ÖREK 이 국가계획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실행 기관은 없음.
정부 체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없음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공간계획에 관한 오스트리아 회의(ÖROK),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협정

현행 국가도시정책

오스트리아에는 국가도시정책이 없으나 *오스트리아 공간개발 구상(ÖREK 2011)*이 오스트리아 집적 정책을 포함하여 도시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OECD 2015). *ÖREK 2011*(적용기간: 2011-2020)은 공간계획에 관한 오스트리아 회의(ÖROK)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인 협정이다(공간계획에 관한 오스트리아 회의, 2011).

*ÖREK 2011*은 국가, 연방주(Länder) 및 도시 수준에서 공간계획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 *ÖREK 2011*의 주요 목표는 간소하고 다중심적(polycentric)인 해결 구조, 중소도시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도시-농촌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수용도가 높은 축선을 중심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지역개발 강화 및 인구증가 관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은 다음 네 가지 방향을 기초로 한다.

1. **지역 및 국가 경쟁력.**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 포함.
2. **사회적 다양성 및 연대.** 사회통합, 기초 서비스 제공, 도시지역의 성장과 삶의 질을 관리할 공간계획 포함.
3.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 자급, 자연재해 위험 공간의 보호, 지속가능한 이동성 포함.
4. **협조적이며 효율적인 처리 구조.** 지역계획 강화, 오스트리아 전역에 대한 집적 정책개발, 농촌과 도시 지역간의 제휴 포함(공간계획에 관한 오스트리아 회의, 2011).

*ÖREK 2011*은 정부부처간의 일관성과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한다. *ÖREK*

2011은 공간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연방정부, 연방주(Länder), 도시,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도구이다(공간계획에 관한 오스트리아 회의, 20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한 통합 수송서비스 및 교통시스템을 포함하여 특정 부문의 정책들이 도시지역을 다루는 경우도 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ÖREK 2011의 실행 제휴단체 중 하나가 현재 도시지역 정책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오스트리아 공간개발 구상(ÖREK 2011)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적당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공간개발 구상(ÖREK 2011)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 Austrian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ÖROK) (2011), *Austrian Spatial Development Concept ÖREK 2011*, Austrian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ÖROK), Vienna, Austria, www.oerok.gv.at/fileadmin/Bilder/2.Reiter-Raum_u_Region/1.OEREK/OEREK_2011/Dokumente_OEREK_2011/OEREK_2011_EN_Downloadversion.pdf(accessed 26 May 2016).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Austria", unpublished.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벨기에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연방 대도시 정책(<i>Politique des Grandes Villes</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1999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부령
선행/부차적 정책	지역 도시정책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각 도시의 의견을 수렴한 부처간 위원회의 참여
실행 기관	연방 사회복지부
정부 체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도시와의 계약

현행 국가도시정책

벨기에 정부의 국가도시정책인 *연방 대도시 정책(Grootstedenbeleid/Politique des Grandes Villes)*은 1999/2000년에 수립되었다(Belgium Federal Public Service, 2016a; OECD, 2015). 동 정책의 주안점은 사회의 화합, 지속가능한 발전 및 도시재건이었다(OECD, 2015). 도시와의 계약이 주된 정책집행 메커니즘이었으며, 17개 도시와 계약이 체결되었다. 2009년 현재, 이 계약들은 매년 갱신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계약(*contrats “ville durable”*)으로 명명되었다. 계약의 목표는 세 가지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으로 구성된다.

1. 근린지역 정체성 확립, 연고 및 접근성 형성 정책을 통한 취약 근린지역의 사회 통합
2. 도시의 생태발자국 감소에 기여
3. 도시간 상호교류 지원(벨기에 연방공익사업, 2016b).

이러한 국가정책 외에도 플랑드르, 왈로니아, 브뤼셀 수도지역은 각자의 지역 도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도시정책은 혁신 촉진, 지역과 지방정부간의 제휴관계 수립,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건을 포함한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유엔인간개발계획, 2015; OECD, 2015).

연방도시계약의 체계는 유럽, 국가, 지방, 지역, 동네 수준의 이해관계자간의 수직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 부처간의 수평적인 조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목표는 독립적인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벨기에 연방공익사업, 2016b).

대도시 정책 서비스(Service Politique des Grandes Villes)는 연방 대도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1년에 창설되었다. 관리부서는 연방 사회통합, 빈곤추방 및 사회경제 정책서비스(Service Public de Programmation(SPP) Intégration Sociale, Lutte contre la Pauvreté et Économie Sociale)이다. 대도시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빈곤추방, 기회균등, 장애인 및 과학정책도 책임지고 있다(벨기에 연방공익사업, 2016a).

연방정부 장관이 *대도시 정책*을 주도하며 부처간 도시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도시계약을 장관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연방 수준의 위원회는 내무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교통부 장관, 사회통합부 장관, 대도시 정책 장관, 건축규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벨기에 연방공익사업, 2016a).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연방 대도시 정책(Grootstedenbeleid/Politique des Grandes Villes)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적당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연방 대도시 정책(Grootstedenbeleid/Politique des Grandes Villes)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대도시 정책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토대로 판단함).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X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 Belgian Federal Public Service (2016a), *Qui sommes nous?* [Who are we?], Belgium Federal Public Service for Social Integration, Anti-Poverty Policy, Social Economy and Federal Urban Policy, Brussels, Belgium, www.mi-is.be/fr/themes/grandes-villes/qui-sommes-nous(accessed 31 May 2016).
- Belgian Federal Public Service (2016b), *Politiques des grandesVilles : contrats*[Big City Policy: contracts], Belgium Federal Public Service for Social Integration, Anti-Poverty Policy, Social Economy and Federal Urban Policy, Brussels, Belgium,www.mi-is.be/fr/themes/grandes-villes/archives/politiques-des-grandes-villes-contrats(accessed 31 May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Belgium", unpublished.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캐나다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도시정책 없음 -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문 또는 지역 정책은 존재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해당 없음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해당 없음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해당 없음
선행/부차적 정책	도시문제에 관한 당내 태스크포스 2001, 도시개발협정 1995
발전 단계	타당성 조사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해당 없음
실행 기관	국가/연방, 지역/지방 및 시 지역 지방정부
정부 체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지방기관, 시/지역 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해당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캐나다는 도시관리를 지방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도시정책이 없다(OECD, 2015). 도시개발 관련 정책은 국가의 부문별 정책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실행된다. 연방/지방/지역 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정부가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목표를 파악하고 일반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환경정책부터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특정 정책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지방 및 지역의 장관 협의회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정책에는 사회기반시설정책, 재정정책, 경제정책, 주택정책(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를 통하여)이 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캐나다 사회기반시설청은 기타 연방 부처는 물론 지방, 지역, 시 정부, 민간부문 및 비영리단체와 공동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요 재정지원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시개발에 기여하고 있다(OECD, 2015). 사회기반시설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구적인 법적 재정지원 원천인 연방 가스세기금(GTF)을 통하여 지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개발청¹(RDAs) 같은 다른 연방정부 부처도 지역 경제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시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개발청은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도시의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도시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정보 수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정책결정에 지역적인 관점을 반영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2016년 정부예산에 대중교통, 쓰레기 및 폐수처리, 공공주택 등의 도시관련 투자예산이 포함되어 있다(McGregor, 2016). 이 계획에 따라 2016년 여름, 캐나다 수상과 브리티쉬

콜롬비아, 퀘벡, 알버타 및 노바스코샤 주지사는 사회기반시설, 특히 대중교통 및 상수도와 관련된 일련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공표하였다.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1995년부터 연방정부는 서부지역의 일부 도시와 도시개발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연방, 주 및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개선함으로써 각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OECD, 2010). 그러나 2010년 모든 도시개발협정이 해지되었다(Doberstein, 2011). 주요 도시에 살고 있는 호주 원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 호주 원주민 전략이 1997년에 수립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하여 호주 원주민의 경제참여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수상 직속의 도시문제에 관한 당내 태스크포스는 캐나다가 국가 “도시 전략”, 공공주택,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장기 재정지원 및 도시관리부서 확립을 권고하였다. 도시관리는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관리부서의 신설은 거부되었으나, 태스크포스의 권고사항은 이후의 사회기반시설 정책에 반영되었다(Spicer, 2015). 2003년 12월, 수상은 추밀원 내에 도시사무국을 설치하고 정무차관에게 도시관리 특별권한을 부여하였다. 2004년 7월, 도시사무국은 사회기반시설청에 흡수되었다. 또한 정부는 도시 및 지역사회 외부자문위원회도 구성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 목적은 모든 규모의 지역사회에 대한 예측가능한 장기 재정지원 확보, 사회기반시설과 사회적 선결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의 발언권 확대 및 연방, 주, 지역 및 지방 정부간의 협력 증진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 분배와 교부금의 증액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원을 추가적으로 배분하였다. 또한 정부는 연방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로 동의하였다.

각주

- ¹ 캐나다에는 캐나다 서부지역 경제다각화청(WD), 애틀랜틱 캐나다 사업지원청(ACOA), 캐나다퀘벡지역 경제개발청(CED), 남부 온타리오 연방경제개발청(FedDev Ontario), 캐나다 북부 경제개발청(CanNor) 및 북부 온타리오 연방경제개발계획(Fednor) 등 여섯 개의 지역개발청이 있다. 최근 여섯 개의 지역개발청 모두 혁신과학경제개발(ISED) 분야의 관할로 편입되었다.

참고 문헌

- Canada's Major Chambers of Commerce and Boards of Trade (2010), "A call for a National Urban Strategy Targeted Toward Canada's Largest Urban Centres", p.3, <http://halifaxchamber.com/wp-content/uploads/2015/05/A-Call-for-a-National-Urban-Strategy-Targeted-Toward-Canada%E2%80%99s-Largest-Urban-Centres-Nov-2010.pdf>(accessed 17 August 2016).
- Dewing M., W.R. Yound and E. Tolley (2006), "Municipalities, the Constitution, and the Canadian Federal System, www.lop.parl.gc.ca/content/lop/researchpublications/bp276-e.htm(accessed 17 August 2016).
- Doberstein, C. (2011), "Institutional creation and death: Urban development agreements in Canada", *Journal of Urban Affairs*, Vol. 33(5), pp. 529-548, <http://dx.doi.org/10.1111/j.1467-9906.2011.00566.x>.
- Dodson, J. et al.(2017, forthcoming), *The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prepared for UN-Habitat, April 2016, draft.
- McGregor, J. (2016), "Federal budget 2016: Liberals push deficit to spend big on families, cities", *CBC News*, 22 March 2016, CBC/Radio-Canada, Ottawa, www.cbc.ca/news/politics/federal-budget-2016-main-1.3501802(accessed 31 May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Canada", unpublished.
-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2016a), "Prime Minister announces new infrastructure agreement with British Columbia", <http://pm.gc.ca/eng/news/2016/06/16/prime-minister-announces-new-infrastructure-agreement-british-columbia>(accessed 17 August 2016).
-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2016b), "Prime Minister of Canada and the Premier of Quebec announces a new infrastructure agreement", <http://pm.gc.ca/eng/news/2016/07/05/prime-minister-canada-and-premier-quebec-announce-new-infrastructure-agreement>(accessed 17 August 2016).
- Spicer, Z. (2015), "With a propensity of Liberal MPs representing major urban centres, expect the Liberal Party's priorities to reflect those of Canada's urban populations", *Policy Options*, 30 October 2015, Montreal, <http://policyoptions.irpp.org/2015/10/30/will-trudeau-urban-agenda-look-like/>(accessed 31 May 2016).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칠레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 도시개발정책(<i>Política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3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승인된 국가정책
선행/부차적 정책	선행 도시정책은 1979 년에 수립되고 1985 년에 개정되었으며 2000 년에 폐지되었음.
발전 단계	실행 및 감시/평가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시민사회, 노동조합, 학계, 의회 의원, 전직 및 현직장관, 전문가 등 28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입안함.
실행 기관	주택도시개발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전문 국가도시정책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국가 도시개발협의회(<i>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i>)를 통해 실행

현행 국가도시정책

칠레는 최초의 명시적 국가도시계획인 *국가도시개발정책(Política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을 2013년에 승인하였다. 정책의 주요 목표는 도시개발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의사결정의 분권화, 부처간 조정 강화, 정책개혁의 준거 제공, 사회적 발전 및 공공과 민간투자의 확실성 확보다(MINVU and UNDP, 2014). 정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사회통합**. 도시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사회적 차별과 주택 적자 해소 포함.
2. **경제개발**. 도시계획과 투자계획의 통합, 도시의 경쟁력 강화, 인간 및 재화의 수송비 절감 포함.
3. **환경적 균형**. 계획에 자연 시스템의 가치 반영, 위험요소 파악, 자원의 효율적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토지이용과 이동성 향상 포함.
4. **문화정체성 및 유산**. 지역사회 정체성에 기여하는 환경 존중, 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 포함.
5. **제도 및 거버넌스 개혁**. 도시 의사결정 분권화, 시민참여 증대, 공공 및 민간계획의 신속한 승인절차 수립 포함(MINVU and UNDP, 2014).

*국가 도시개발정책(Política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은 주택도시개발부가 조정하였으며(MINVU) 칠레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한 자문위원회가 입안하였다(MINVU and UNDP, 2014; OECD, 2013).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노조원, 학자, 국회의원, 전현직

장관,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되었다. 학계 실무단, 지역기관, 11개부처 대표자들이 위원회를 지원하였다(MINVU and UNDP, 2014).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도시개발협의회(*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를 창설하였다. 협의회의 주된 임무는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정책의 개정 건의, 국가입법 개혁방안 제의, 국가도시정책에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실무단 구성이다(Government of Chile, 2016). 협의회는 2015년, 도시와 사회통합을 위한 토지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발간하였고 지방 수준에서 도시계획과 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OECD, 2015).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타 정책으로는 도시개발 및 건축 일반법(*Ley General de Urbanismo y Construcciones*)과 도시계획과 건축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Ordenanza General de Urbanismo y Construcciones*)가 있다. 일반법에는 도시계획, 도시화 및 건축에 관련된 기관, 개인 또는 전문가들을 규제하기 위한 원칙, 특성, 책임, 권리, 재제 및 기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조례는 행정절차1), 계획수립 과정2) 및 도시화와 건물 관련 기술설계 기준3)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5).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2000년에 선행 도시정책이 폐지된 이후 2014년 국가도시정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칠레에는 일반 도시개발정책이 없었다. 국가수준의 정책 부재로 인한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인식한 칠레 대통령은 2012년, 국가 도시개발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Comisión Asesora Presidencial, Política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를 창설하여 현행 국가도시정책의 개발에 착수하게 하였다(OECD, 2013).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국가 도시개발정책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¹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국가 도시개발정책(Política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X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각주

¹ 국가 도시개발정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2차 국가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의 초안이 시민의견 수렴단계에 있다. 환경부가 그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첫 번째 계획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으로서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필요성을 규정하였다. 도시 기후변화 적응계획 이 입안 중에 있으며 2017년에 공표될 예정이다.

참고 문헌

- Dodson, J. et al.(2017, forthcoming), *The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prepared for UN-Habitat, April 2016, draft.
- Gastelbondo A.J. (2015), *Evaluation of the National Urban Polic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repared for UN-Habitat, November 2015, draft.
- Government of Chile (2016), *¿Qué es el CNDU?* [What is the CNDU?], National Council on Urban Development (*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 Government of Chile, <http://cndu.gob.cl/en-que-estamos/> (accessed 1 June 2016).
- MINVU (Chilean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 and UNDP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2014), *National Urban Development Policy: Sustainable Cities and Quality of Life*, MINVU and UNDP, Santiago, Chile, www.patrimoniourbano.cl/wp-content/uploads/2014/06/L4-Politica-Urbana-ingles_baja.pdf.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Chile", unpublished.
- OECD (2013), *OECD Urban Policy Reviews: Chil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808-en>.

체코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도시정책의 원칙(<i>Zásadyurbánnípolitiky</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0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행정부 지침
선행/부차적 정책	2014-2020 지역개발전략
발전 단계	진단/도시정책의 원칙 작성 중: 2010 년 초판 발행, 2016 년 3 분기 개정 예정 최종단계: 정부 결정 No.344, 2013 년 5 월 15 일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이전까지는 2007-2013 체코공화국 지역개발전략에 포함되어 있었음.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법률 No.248/200 에 의거) 도시정책의 원칙은 지역개발전략 실무단에 의해 참여방식으로 작성됨.
실행 기관	지역개발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해당 없음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2010년, 체코의 지역개발부는 *도시정책의 원칙(Zásadyurbánnípolitiky)*을 공표하였다(OECD, 2015). 동 문건의 목적은 모든 정부부처의 도시개발 업무를 조정하고 기존의 부문정책을 도시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동 문건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1. 도시와 지역정책 연결 및 도시-농촌 연계 지원을 포함한 도시정책의 지역적 특성.
2. 각 부처의 토지사용계획 조정, 도시간 네트워크 확대 및 도시와 다양한 크기의 소도시와의 관계 강화를 포함한 인구유형의 다중심적인 개발.
3.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업무 조정을 포함한 도시개발에 대한 전략적, 통합적 접근방법.
4. 창업, 연구와 혁신, 사회기반시설, 공공주택, 사회적 화합 및 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포함한 지역개발중심으로서의 소도시 개발 촉진.
5.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녹지공간과 녹지대의 보호를 포함한 도시환경 보호.
6. 이해관계자간 소통, 도시-농촌간 제휴 및 정보공유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 제휴관계 수립 및 경험 공유(Czech Ministry of RegionalDevelopment, 2010).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도시정책의 원칙 공표 이전에는 도시정책이 체코공화국의 *지역개발전략*에 통합되어 있었다. 원칙은 여전히 지역적 접근방법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접근방법임을 강조한다. 2007-2013 국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동 문건은 독립적인 지침 및 조정 문건으로 입안되었다. 원칙은 2013년 이후 포괄적인 국가도시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Czech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2010). 현재까지 포괄적인 국가도시정책 개발은 착수되지 않고 있다(Dodson 외, 2016). 그러나, 원칙은 국가도시정책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행위 자체가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도시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분야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7년 간행). 뿐만 아니라, 2014-2020 *지역개발전략*에는 도시를 기능적 시가지의 맥락에서 고려하고 도시-농촌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OECD, 2014). 원칙은 다가올 유럽연합 도시의제와 연계하여 2016년 하반기에 개정예 착수할 예정이다(OECD,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도시정책의 원칙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적당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저조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도시정책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 Czech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2010), *Principles of Urban Policy*,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Prague, www.mmr.cz/getmedia/f333120b-88d5-4bd8-bec9-dd58a26f9812/principles_of_urban_policy.pdf(accessed 1 June 2016).
- Dodson, J. et al.(2017, forthcoming), *The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prepared for UN-Habitat, April 2016, draft.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Czech Republic", unpublished.
- OECD (2014), *OECD Regional Outlook: Regions and Cities: Where Policies and People Mee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415-en>.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덴마크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명시적인 국가도시정책 없음. 2가지의 도시개발정책: 덴마크 도시재건 및 개발법(2015), 덴마크 계획법(<i>Vækstogudvikling I hele landet</i>)[<i>덴마크의 성장과 발전</i>](2015)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5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제정법
선행/부차적 정책	<i>빈민가 전략</i> (2010)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관련 정보 없음.
실행 기관	기업성장부, 이민통합주택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덴마크에는 명시적 국가도시정책 체계는 없으나 두 가지의 국가정책에 의해 도시개발을 관리한다. 2015년 시행된 *덴마크 도시재건 및 개발법*은 지방당국이 도시 및 주택 관련 정책, 특히 주택의 공급 및 재건을 추진할 도구가 된다(OECD, 2015; Government of Denmark, 2015a). 이민통합주택부가 동 법률의 전반적인 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2015년 시행된 *덴마크 계획법*은 공간계획에 대한 체계를 규정해 도시정책의 실행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성장부가 동 법률의 집행을 책임지고 실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정하며, 지방당국이 자체 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침과 비전을 실현시킨다(OECD, 2015).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코펜하겐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가도시정책은 코펜하겐 대도시권의 정책과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van den Berg, Braun and van der Meer, 2004).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2010년, 정부는 *빈민가 전략(ghetto-strategi)*은 29개 도시지역의 주택과 사회통합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되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도시정책관련 부처의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1993년에 구성된 도시위원회가 도시개발을 감독하고 있다. 1998년 도시부가 신설되었으나 2001년에 폐지되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현재 기업성장부가 도시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교통은 교통건설부 소관이며, 주택정책은 이민통합주택부(Government of Denmark, 2016), 기후변화 적응은 환경부가 전담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덴마크 도시재건 및 개발법 또는 덴마크 계획법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적당함
공간구조	수준 높음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당함
기후변화 대응	적당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덴마크 도시재건 및 개발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덴마크 정부, 2015a에 의거).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 Dodson, J. et al.(2017, forthcoming), *The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prepared for UN-Habitat, April 2016, draft.
- Government of Denmark(2016), "Ministries",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tatsministeriet*) website, Copenhagen, www.stm.dk/a_2820.html(accessed 2 June 2016).
- Government of Denmark (2015a), *The Danish Act on Urban Renewal and Urban Development* (in Danish), Government of Denmark website, 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73548(accessed 22 June 2016).
- Government of Denmark (2015b), *The Danish Planning Act* (in Danish), Government of Denmark website, 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44425(accessed 22 June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Denmark", unpublished.
- OECD (2014), *OECD Regional Outlook: Regions and Cities: Where Policies and People Mee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415-en>.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 Van den Berg, L., E. Braun and J. van der Meer(2004), "National Urban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Institute for Comparative Urban Research (EURICUR),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에스토니아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지역개발전략 2014-2020(RDS)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4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국가개발전략
선행/부차적 정책	지속가능한 에스토니아(2005), 에스토니아 2020(국가경쟁력 확보전략), 국가공간계획 "에스토니아 2030+"(2012)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관련 정보 없음.
실행 기관	재무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해당 없음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재무부가 RDS의 실행을 조정할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정부기관임. 또한 지역개발전략 2014-2020 실행 감시위원회(부처 및 관련기관 대표로 구성)도 실행에 관여함.

현행 국가도시정책

에스토니아에는 명시적인 국가도시정책 자체는 없다. 도시개발 문제는 2012-2020 지역개발전략(Eestiregionaalarengustrateegia)(RDS)에서 다루고 있다. 2014년 3월, 2020년까지의 국가, 지역 및 도시개발정책의 체계를 규정한 새로운 RDS가 승인되었다. RDS에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부도심의 쇠퇴와 같은 도시문제가 부각되어 있다. RDS는 다음 네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균등한 기회 제공
2. 혁신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통해 국제 경제력을 갖춘 도시
3.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
4. 지역간의 연결성 및 협력 증대

RDS는 대도시 지역(인구 50,000명 이상, 전국 5개 도시)와 군 지역(인구 4,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다른 역할을 상정한다. 대도시 지역과 관련된 정책은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RDS를 통하여 외국의 전문가를 유치하여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조치는 물론, 지속가능한 교통 및 보육에 대한 투자, 저개발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지역은 배후지에 대한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처로 간주된다. RDS를 통하여 군 지역과 배후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전 지역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체육 기반시설을 개발하며, 도시 공공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업 및 상업지역의 공공 사회기반시설 투자도

대부분 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OECD, 2015).

다음 사항을 특히 강조한 점을 제외하고는 선행 RDS와 비교해서 도시지역 정책목표가 눈에 띄게 변경된 부분은 없다.

- 도시지역 내의 협력, 교류 및 합동기획
- 군 지역을 보다 양질의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배후지 개발의 원동력으로 육성(OECD, 2015).

국가경쟁력 확보전략인 *에스토니아 2020 실행계획 2016-2020*(2016)에는 도시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지역 개발에 명확하게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에 반영되어 있다. 그 예로 철도연결망 개선, 외국 전문가 유치 및 적응력 배양을 위한 조치 실행,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연합 구조기금 지원 연계를 들 수 있다(에스토니아 정부, 2016).

에스토니아 국가공간계획 2030+(2012년 채택)은 일반 주거구조, 이동성, 접근성 및 교통 기반시설(도시지역 내부 및 지역간 포함),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발을 상징하는 국가공간 개발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에스토니아는 2005년에 2005-2015기간을 위한 선행 RDS를 수립하였다. 전략의 주요 주제는 국가 전반의 생활수준과 경쟁력 증진에 있어 지역균형을 유지하고 탈린 및 기타 도시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2005-2015 RDS에는 국가도시정책 개발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관된 지역정책 이외의 명시적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2013년에 종료된 유럽개발기금은 “도시지역 개발 프로그램”에 공동 출자하였다. 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여부는 알 수 없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2014 지역개발전략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저조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당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지역개발계획 2014-2020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Estonian Ministry of Finance, 2014에 의거)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 Estonian Ministry Finance (2016a), *Eestiregionaalarengustrateegia 2014-2020*, Ministry of Finance webpage,
Tallinn, www.fin.ee/public/Regionaalareng_ja_poliitika/Eesti_regionaalarengu_strateegia_2014-20.pdf. Estonian Ministry Finance (2016b), *Üleriigiline Planeering Eesti 2030+*, Ministry of Finance webpage,
Tallinn, www.fin.ee/public/Ruumiline_planeerimine/A4_5mmBleed_Eesti_2030_sisu_111212.pdf.
Government of Estonia (2016), *Estonia 2020 Action Plan 2015-2020*, approved by Government of Estonia 5 May 2016, http://ec.europa.eu/europe2020/pdf/csr2016/nrp2016_estonia_annex1_en.pdf (accessed 3 June 2016).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Estonia", unpublished.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핀란드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도시성장협정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6-2018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약
선행/부차적 정책	지역 혁신과 실험의 착수, <i>근린지역프로그램(Lähiöohjelma)</i> (2008-2011), <i>도시정책</i> (2007)
발전 단계	실행/평가 및 감시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관련 정보 없음.
실행 기관	경제고용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핀란드에는 공식적인 국가도시정책이 없지만 국가도시정책 체계의 주요 요소로 볼 수 있는 도시개발에 기여하는 국가 프로그램은 존재한다. 그 중 주된 프로그램이 도시성장협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약에 기반한 이러한 협정은 참여 도시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2015 기간 동안 최초로 실행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실행기간은 2016-2018이었다. 성장협정은 경쟁력 및 회복력, 토지이용, 주택 및 교통,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를 다룬다. 도시는 몇 가지의 전략적 주제에 집중한다. 국가 수준에서는 경제고용부가 성장협정을 주도하며 헬싱키, 탐페르, 튀르쿠, 오울루와 함께 환경부 및 교통통신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한다(핀란드 고용경제부, 2016a; OECD, 2015).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는 *혁신도시 프로그램(INKA)*(2014-2017)이 있다.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기업의 육성이다. 긴밀한 지역 협력과 과학계, 교육계, 기업 및 정부간에 동원된 자원으로 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채용한 방법론에는 새로운 개발환경, 개척시장 창출, 전문기술 강화를 위한 국내 및 국제협력이 포함된다(OECD, 2015).

INKA - 프로그램 이 2017년에 종료되더라도 *혁신도시 프로그램* 관련 주제들과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핀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섯 개 도시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계속 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여섯 개의 대도시(헬싱키, 에스포, 반타, 탐페르, 튀르쿠 및 오울루)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지역 혁신 및 실험(AIKO) 프로그램(2016-2018)의 일부도 도시개발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 AIKO는 다음의 세 가지 수단을 포함한다.

1. 예상되는 구조적 변화를 위한 조치(ERM)
2. 정부와 선별된 도시간의 성장협정
3. 국가적으로 중요한 성장지역 조성 방법

성장협정은 특히 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협정의 목적은 소수의 전략적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제안서를 제출한 여섯 도시와 2016년 6월 9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헬싱키 지역과 체결한 협정은 도시정책에 포함됐다.

도시정책위원회는 도시정책을 감독한다. 위원회는 2007년에 설치되었으며 2016년 5월에 새로운 도시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목표는 중앙-지방간 제휴 강화 및 도시의 재생, 경쟁력, 사회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증진이다. 위원회는 부처의 도시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도시지역간 협력을 강화하며, 핀란드 국내외 도시간 경험 공유를 촉진시킬 책임을 지고 있다. 경제부 장관은 도시정책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정부부처, 14개 도시 및 핀란드 지방 및 지역기관협의회를 대표한다(핀란드 고용경제부, 2016b).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Lähiöohjelma*(또는 근린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이 국가 프로그램은 도시 구역의 재건을 위해 지방정부와 제휴하여 실행되었다(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 2013; 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2007년에 수립되어 환경부가 실행한 *도시정책(Metropolipolitiikka)*은 헬싱키 지역의 도시개발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핀란드 환경청, 2016; 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도시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토지이용, 주택 및 교통문제와 관련한 협력 증진이다. 도시정책은 경제부 장관이 주도하는 2014-2019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의 특징이었다(핀란드 환경청, 2016).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도시성장협정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저조함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당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핀란드 도시/성장협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Finnis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2016a) "Growth agreements", Ministry of Employment and Economy website, <http://tem.fi/en/growth-agreements> (accessed 23 June 2016).

Finnis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2016b) "Urban Policy Committee", Ministry of Employment and Economy website, <http://tem.fi/en/urban-policy-committee> (accessed 23 June 2016).

Finnish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16), "Metropolitan Policy", www.ym.fi/en-US/Land_use_and_building/Programmes_and_strategies/Metropolitan_policy (accessed 3 June 2016).

Housing Finance and Development Center of Finland (2013), *Lähiöohjelmapäättyy, lähiöiden kehittäminen jatkuu*, Housing Finance and Development Center of Finland webpage, 18 February 2013, Helsinki, Finland, www.ara.fi/fi-FI/Ajankohtaista/Uutiset_ja_tiedotteet/Uutiset_ja_tiedotteet_2011/Lahiohjelmaja_paatty_lahioiden_kehittami (accessed 3 June 2016).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Finland", unpublished.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프랑스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도시정책(<i>Politique de la ville</i>), <i>도시계약 2015-2020</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4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2014년2월21일 제정된 법률에 의해 도시통합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개정된 행정부 정책
선행/부차적 정책	<i>사회통합계약(Les Contrats Urbains de Cohésion Sociale - CUCS) 2006-2014</i>
발전 단계	실행/감시 및 평가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참여 과정: 도시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공 및 시민사회 대표들과 협의하여 입안.
실행 기관	지역평등일반위원회(CGET)는 <i>도시/정책</i> 의 입안과 설계에 있어 정부를 자문하고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총리실 소속으로 부처간 도시위원회(CIV) 및 최근 구성된 부처간 평등시민권위원회(CIEC)를 통하여 부처간에 도시정책을 조정하고 감시한다. CGET는 도시재건축(<i>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 Anru</i>)을 감독한다.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전문 국가도시정책기관: 도시계약의 도시재건 부문을 담당하는 도시재건축(ANRU)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도시계약은 계약당사자인 도시가 이행함.

현행 국가도시정책

2014년, 프랑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간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도시계약을 규정한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을 개정하였다. 2015-2020 기간에 적용되는 도시계약은 동시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며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제활동과 고용 개발.** 고용센터 운영, 청년 고용지원 및 지방기업 지원 포함.
2. **사회통합.** 교육, 조건, 치안 및 사회, 문화, 체육활동에 대한 투자 지원 포함.
3. **주거환경 및 도시재건.** 주택개발, 근린 서비스 및 활동,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 포함(CGET, 2015; OECD, 2015).

CGET는 부처간 도시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을 지원하고 그 결정을 감시한다.

CGET는 또한 도시재건축(*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Anru)*)도 감독한다.

CGET는 도시계약에 감시 및 평가 규정을 반영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감시를 도시정책감독청(ONPV,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olitique de la ville*)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5-2020 도시계약에서는 시민협의회로 대표되는 표적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주민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협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CGET, 2015).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세 개의 대도시(파리, 리옹, 마르세이유)를 포함해 15개 대도시 지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야심찬 도시관리 개혁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대도시 시스템”은 기타 수준 정부들의 도시문제 관련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프랑스의 도시정책은 공공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977년에 체결한 최초의 도시계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계약의 주안점은 확대되어 기타의 개발 우선사항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1994-2006 도시계약은 주택재건부터 고용과 교통에 이르는 광범위한 우선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006-2014 도시 사회통합계약은 취약 근린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프랑스 도시·청소년·스포츠부, 2014).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2014 도시정책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적당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조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X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CGET(General Commission on Territorial Equality/*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 (2015), *Les contrats de ville*[City contracts], CGET webpage, updated 29 July 2015, www.cget.gouv.fr/contrats-de-ville(accessed 6 June 2016).

French Ministry of the City, Youth and Sports (*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14), *Contractualisation*, French Ministry of the City, Youth and Sports webpage, updated 29 October 2014, www.ville.gouv.fr/?contractualisation,3542(accessed 6 June 2016).

French Ministry of the City, Youth and Sports (*Ministè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11), *Cadre institutionnel*[Institutional framework], French Ministry of the City, Youth and Sports webpage, updated 24 October 2011, www.ville.gouv.fr/?cadre-institutionnel(accessed 6 June 2016).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France", unpublished.

독일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도시개발정책 -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공동계획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07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행정지도/체계 문건
선행/부차적 정책	공간개발 구상과 전략(2006)
발전 단계	감시 및 평가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회의 결의, 도시개발담당 장관회의의 결의
실행 기관	환경건축부
정부 체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도시개발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국가도시개발위원회

현행 국가도시정책

2007년 채택된 *지속가능한 유럽도시에 관한 라이프찌히 헌장*에 대응하여 독일은 같은 해에 도시화에 대한 국가정책 접근법을 규정한 *독일의 국가 도시개발정책의 방향*이라는 비망록을 공표하였다. 동 비망록에는 여섯 개의 주요 정책분야가 부각되어 있다.

1. **시민사회**-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중시
2. **사회적인 도시**- 기회 창출 및 통합 유지
3. **혁신적인 도시**- 경제개발의 동력으로서의 도시개발 중시
4. **기후 보호 및 세계적인 책임**
5. **건축문화와 도시 디자인 개선**
6. **지역화** - 도시 미래의 핵심적인 부분인 지역의 중시(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비망록을 바탕으로 *국가도시정책에 관한 파펜부르크 선언*(2007)이 공표되었다.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공동계획은 라이프찌히 헌장에 명시된 통합 도시개발에 관한 일반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보다 더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체계와 의사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국가도시개발위원회의 창설로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Dodson 외, 2015). 국가도시개발위원회에는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 전문가, 세입자 및 부동산 소유주, 건설업계 및 건물매매업계, 시민사회단체(문화, 종교, 환경 및 사교단체 포함)의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국가도시개발정책*은 통합 도시개발 접근법에 대한 교환 플랫폼 역할을 한다. 특히 연차

공동계획 연방회의는 독일의 도시와 지방기관을 위한 가장 주된 토론장이다. 감시 및 평가는 특정 연방정부 부처의 소관사항이다(유엔인간개발계획, 2015). 현재 *Aktive Stadt- und Ortsteilzentren*(“활동적인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및 *Soziale Stadt*(“사회적인 도시”)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다(OECD, 2015).

2014년 초, 국가도시정책 체계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이관으로 도시 주택가격 상승과 도시의 난민수용문제와 아울러 취약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OECD,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독일의 국가 도시개발정책의 방향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적당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당함	
기후변화 대응	광범위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독일의 국가도시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 Beckmann et al. (2007), *Auf dem Weg zu einer internationalen Stadtentwicklungspolitik*, BMVBS/BBR, Memorandum, Bonn.
- Bauministerkonferenz(2007), *Papenburger Erklärung zur Nationalen Stadtentwicklungspolitik*, TOP 5 - Anlage der 115. Bauministerkonferenz am 27./28. September 2007 in Papenburg.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Germany", unpublished.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repared for UN-Habitat, Centre for Urban Research, RMIT University, Melbourne, December 2015.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그리스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명시적 정책 없음. 두 가지의 도시정책: <i>공간과 도시계획 개혁 -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개선 및 민간 도시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i> - <i>산림입법 규정 및 후속 조항</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4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제정법
선행/부차적 정책	관련 정보 없음.
발전 단계	감시 및 평가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관련 정보 없음.
실행 기관	- 환경에너지부(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및 토지은행국)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 아테네에 대하여는 법률 4305/2014의 40조에 의거 수정된 PD100의 31조에 따라 도심 및 교외지역계획국이 <i>아테네 규제계획</i> 의 실행을 감독하고 있다. - 경제개발관광부가 도시개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 체제	관련 정보 없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법률4269/2014(142/A/28.6.2014)*공간과 도시계획 개혁 - 지속가능한 발전* 이 법률2508/97을 대체하며 국가, 지역 및 지방의 공간과 도시계획, 도시개발을 위한 새로운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4280/2014 *환경개선 및 민간 도시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 - 산림입법 규정 및 후속 조항*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테네에 대하여 법률4277/2014 새로운 아테네 규제계획이 한편으로는 아티카 지역, 다른 한편으로는 아테네 전역의 계획 및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에너지부(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및 토지은행국)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아테네에 대하여는 법률 4305/2014의 40조에 의거 수정된 PD100의 31조에 따라 도심 및 교외지역계획국이 *아테네 규제계획*의 실행을 감독하고 있다.

경제개발관광부가 도시개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법률4269/2014(142/A/28.6.2014)공간과 도시계획 개혁 - 지속가능한 발전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관련 정보 없음.
공간구조	관련 정보 없음.
인간개발	관련 정보 없음.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없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 없음.

참고 문헌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Greece," OECD, Paris.

OECD (2010),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Greece 200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61330-en>.

Serraos, K., E. Gianniris and M. Zifou (2004), "The Greek spatial and urban planning system in the European context", in G. Padovano and C. Blasi, eds., *Complessità eSostenibilità, Prospettive per iterritorieuropei: strategie di pianificazione in dieciPaesi, Rivistabimestrale di pianificazione e progettazione*, Poli.design Publishing, 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92074559_The_Greek_spatial_and_urban_planning_system_in_the_European_context(accessed 7 June 2016).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헝가리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정주계획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6-2017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정부 결정
선행/부차적 정책	국가개발 2030- 국가개발 및 지역개발 구상(NDTC)
발전 단계	공식화 - 2016년 5-6월 연방선거 중 보류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관련 정보 없음
실행 기관	총리실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입수 중)

현행 국가도시정책

현재 헝가리에는 단일 국가도시정책은 없으나,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도시개발에 대한 국가 지침은 있다. 명시적 도시정책(국가정주계획)은 유럽 및 유엔 인간정주회의 도시 의제와 병행하여 총리실에서 입안하고 있다. 국가정주계획을 정부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도시정책의 일반원칙은 국가개발 및 지역개발 구상(시행기간: 2014-2030)에 포함되어 있다(OECD, 2015). NDTC에는 주로 목표 3.1.4 "다중심의 공간구조를 보장하는 도시네트워크 개발"에서 도시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네트워크 개발에 중점을 두며 기능적 도시지역을 육성하며 특히 부다페스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목표가 명시되어 있다(헝가리 정부, 2014).

구축환경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LXXVIII, 1997) 및 공간개발과 물적 계획에 관한 법률(법률 XXI, 1996) 등의 소규모 부문정책도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법률들이 적절하게 통합 또는 연계되지는 않고 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NDTC는 국가경제부 소관사항이다. 총리실은 공간 및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고 개발을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식을 제공한다(OECD,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국가정주계획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적당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광범위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국가정주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 Government of Hungary (2014), "National Development 2030: National Development and Territorial Development Concept", *Hungarian Official Journal*, Vol. 2014(1), http://regionalispolitika.kormany.hu/download/b/c9/e0000/OFTK_vegleges_EN.pdf (accessed 7 June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Hungary", unpublished.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아이슬란드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i>아이슬란드 2020</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1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행정지도
선행/부차적 정책	해당 없음.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관련 정보 없음.
실행 기관	총리실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아이슬란드에는 국가도시정책이 없으나, *아이슬란드 2020 - 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의 정책강령*이 지역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15; 아이슬란드 총리실, 2011). 아이슬란드 2020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책임하에 남서부 지역(레이카비크 포함)에 대한 특별 지역계획을 수립할 것과 내무부 책임하에 레이카비크 지역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아이슬란드 총리실, 2011).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i>아이슬란드 2020</i> 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해당 없음
공간구조	해당 없음
인간개발	해당 없음
환경적 지속가능성	해당 없음
기후변화 대응	해당 없음

참고 문헌

Icelandic Prime Minister's Office(2011), *Iceland 2020 – Governmental policy statement for the economy and community*, Prime Minister's Office, <https://eng.forsaetisraduneyti.is/media/2020/iceland2020.pdf> (accessed 7 June 2016).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Iceland", unpublished.

아일랜드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계획체계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형성 중(2017년 초 시행예정)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해당 없음.
선행/부차적 정책	국가개발계획(NDP) 및 국가공간전략 2002-2020(NSS)
발전 단계	공식화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이해관계자의 참여
실행 기관	환경,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해당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아일랜드에는 명시적 국가도시정책이 없다. 그러나 2013년부터 개발하여 2017년 초 완료 예정인 국가계획체계에 도시 및 소도시 개발정책이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12월에 발간된 국가계획체계의 로드맵에는 다음 네 가지의 예상 주제가 명시되어 있다.

1. 도시, 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만들 잠재력 극대화
2. 사회기반시설 투자우선순위 파악
3.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4. 자원자원과 문화유산의 복원(아일랜드 환경커뮤니티지방정부청, 2015).

도시,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잠재력 극대화 주제에는 지역도시 및 전략 지역소도시와 관련된 목표가 포함된다(아일랜드 환경커뮤니티지방정부청, 2015).

2016년 총선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전 정부의 국가계획체계 수립 공약을 재확인하였다(Coveney, 2016).

국가계획체계가 입안되고 있는 중에는 아일랜드 국가공간전략(2002)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Coveney, 2016). 동 전략의 세가지 주요 목표는 지역 균형개발, 도시와 지역간의 협력 및 제휴 증진 및 사회기반시설 집중 개발이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국가공간전략의 실행에 있어 각층의 정부 부처간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지역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및 실행측면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Dodson 외, 2015). 국가공간전략은 지방 및 지역계획을 국가전략과 부합하도록 조정할 것을 규정한 계획 및 개발(개정) 법률 2010에 의해 보강되었다(Coveney, 2016).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타 정책

2016년 발간된 *제휴정부 프로그램*은 도시재건 우선순위를 정한다. 동 프로그램에는 최근 아일랜드 경제위기의 타격을 입은 도시지역의 재건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련의 실행계획이 명시되어 있다(아일랜드 수상청, 2016). 소도시와 촌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생활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소도시 및 촌락 재건계획*의 제안을 예로 들 수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련의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일랜드 전역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살아있는 도시 계획* 과 유사한 계획의 도입. *살아있는 도시 계획*은 더블린, 코크, 리머릭, 골웨이, 워터포드 및 킬케니(재무부 장관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정책이다.
- 공한지 및 유휴지의 주택건설 및 도시재건 목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공한지세에 추가하여 유휴지 등록시스템 확립
- 지방정부에 대한 토지관리권한 추가 위임
- 도시지역 지상구간의 공한지 또는 유휴지를 재분류하여 주거용 및 상업용으로의 이용을 유도할 유인책 강구
- 정부, 준정부 및 민간부문의 공한지 미사용 및 비축을 막기 위한 *공한지법*의 개정 범위 검토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1985년 아일랜드는 국내 5개 주요 도시에 대한 *도시재건계획*을 제정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후신인 새로운 도시재건계획이 1999년 제정되어 마침내 5개 대도시와 38개 소도시에서 실행되었다(유엔인간정주회의,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국가계획체계의 부문별대표성 (로드맵에 근거한)
경제발전	적당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광범위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국가계획체계는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아일랜드 환경커뮤니티지방정부청, 2015).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 Coveney, S. (2016), "Written Answers, Department of Environment,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National Planning Framework" text by Simon Coveney, Minister for Housing, Planning and Local Government, 18 May 2016, KildareStreet.com webpage, www.kildarestreet.com/wrans/?id=2016-05-18a.281 (accessed 8 June 2016).
- Irish Department of Environment,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2015), *Towards a National Planning Framework: A Roadmap for the delivery of the National Planning Framework 2016, December 2015*, Ireland Department of Environment,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Dublin, www.environ.ie/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iles/towards_a_national_planning_framework_december_2015.pdf (accessed 8 June 2016).
- Irish Department of the Taoiseach (2016), *A Programme for Partnership Government*, published by the Irish Government 11 May 2016, www.taoiseach.gov.ie/eng/Work_Of_The_Department/Programme_for_Government/A_Programme_for_a_Partnership_Government.pdf (accessed 13 July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Ireland", unpublished.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이스라엘¹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건설, 개발, 보존을 위한 포괄적 국가종합계획(국가종합계획 35 또는 <i>Tama 35</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05 시행, 2016 개정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법적 국가공간계획
선행/부차적 정책 ²	주택 우선공급지역 건설촉진 국가위원회(CPHA), 국가도시위원회 및 기타 기관이 승인한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주택공급 프로그램.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국가계획위원회의 추천(여섯 개 지역계획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하고 정부가 승인. 2013년 현재 승인기관은 “주택 내각”(토지 및 주택의 계획, 건설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임.
실행 기관	재무부 - 이스라엘 계획관리국(IPA)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국가계획관리국 - 재무부 소속 전담부서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이스라엘은 현재 국가도시정책을 통합하려는 과정에 있다(이하 상세설명).

2005년부터 국가공간계획인 *건설, 개발, 보존을 위한 포괄적 국가종합계획*(NOP 35, 국가종합계획 35, NMP 35 또는 *Tama 35*로도 칭함.)이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OECD, 2015; Assif, n.d.; Reut Institute, 2009).

NMP 35

NMP 35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집중화된 분산.** 국가 수준에서 인구 분산을 추진하되 지역 수준에서 도시지역에 집중시킴.
2. **도시 구조.**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및 베르세바의 네 도시 선정.
3. **공공용지의 공간구조.**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국가적인 “녹색중추” 및 도시지역 녹지대 조성 촉진(Assif, n.d., Reut Institute, 2009).

NMP 35는 개발원칙을 설정한다. NMP 35는 개발지향 지역 및 보존지향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구조” 또는 “양식” 범주를 규정한다. 또한 대중교통, 사회기반시설 통로의 통합,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킨다(OECD, 2015).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타 정책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타 정책과 수단은 다음과 같다.

- 건설주택부가 구성한 국가도시위원회(정부 관련부처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체). 국가도시위원회의 목표는 *국가도시전략* 입안 및 촉진 수단 개발이다. 보다 광의의 목표로서 도시를 "기회"로 인식, 다차원적인 관리, 모든 도시 포괄, 실행가능성, 보행환경 조성, 공공시설, 다양성 및 상호관계, 재건 및 지속가능성 등의 과정 체계에 주요 정책원칙을 규정하였다.
- *정부주택전략계획*(국가경제위원회와 이스라엘 계획관리국이 입안 중임.)
- 국유지, 보조금 및 주택매입/임대 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메커니즘을 포함한 특혜 프로그램.
- 지방 수준에서의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본 협정.
- *철거 및 건축 프로그램, 과세 프로그램 및 건축권 확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도시재건 프로그램. 또한 건설주택부 산하 도시재건청을 통한 도시재건 촉진을 위한 법안도 제출되었다.
- 신속승인절차를 통해 이스라엘 주택공급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CPHA(주택 우선공급 지역 건축촉진 국가위원회)의 창설.
- 국가종합계획 38 - 내진구조 강화, 도시재건 및 개발을 위한 수단.
- 개혁 - 계획 및 건축법(2014)에 대한 개정 101호 - 계획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양.
- 도시와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도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지역종합계획의 장려 및 입안.
- 공공지역(토지 및 시설포함)의 사용 및 배정을 위한 지침(계획관리국, 2016년 7월), *도시는 살아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전략(환경보전부, 2015), 대중교통 개발을 위한 전략적 계획(교통부 및 재무부, 2012), 도시 도로계획지침(건설주택부, 2009) 등과 같은 매뉴얼, 지침 및 전략 문건.
-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과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2016년, 계획관리국의 주도로 개최된 전문가와 일반대중이 모두 참여한 경연대회인 *도시 각성 프로젝트*.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NMP 35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저조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당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NMP 35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각주

¹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이 그 책임하에 제공한다. OECD가 동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국제법에 따른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지위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² 동 정책들은 NMP 35에서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NMP와 함께 국가도시정책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문헌

- Assif, S. (n.d.), "Principles of Israel's Comprehensive National Outline Plan for Constructio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NOP 35)," Israel Ministry of Interior website, www.moin.gov.il/SubjectDocuments/Tma35_PrinciplesDocument.pdf (accessed 8 June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Israel", unpublished.
- Reut Institute (2009), "Tama 35 - Integrated National Master Plan for Constructio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The Reut Institute website, 2 February 2009, Tel Aviv, <http://reut-institute.org/en/Publication.aspx?PublicationId=3744> (accessed 8 June 2016).

이탈리아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정책 없음. 국가 수준에서 부문 도시정책 조정.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해당 없음.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해당 없음.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해당 없음.
선행/부차적 정책	도시 I 1994-1999, 도시 II 2000-2008 및 소위 "복합 프로그램"(소위 <i>Priu, PRU, Contratti di Quartiere, PRUSS, SISTeMA - Porti & Stazioni - PUM</i>), 국가운영 프로그램 METRO 2014-20
발전 단계	해당 없음.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해당 없음.
실행 기관	해당 없음. 도시정책 조정을 위해 부처간 도시정책위원회를 운영함.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해당 없음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해당 없음. 도시정책 조정을 위해 부처간 도시정책위원회를 운영함.

현행 국가도시정책

이탈리아에는 국가도시정책이 없다. 그러나 도시에 권한을 더 위임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시스템을 조정했다. 2014년 4월7일 시행된 법률 56호, *대도시, 주, 지방자치연합 및 지방자치합병*에 의해 토리노, 밀라노, 베네치아, 제노바, 볼로냐, 피렌체, 바리, 나폴리, 레지오칼라브리아 및 수도 로마의 10개 광역시가 탄생하였다. 해당 도시를 관할하던 주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광역시 지역 주된 도시의 시장이 대표하는 광역시 정부로 대체되었다(OECD, 2015).

광역시 조성목적은 광역시 지역의 전략적인 개발, 공공서비스의 통합관리, 사회기반시설 및 통신망의 개발, 해당지역 및 기타 유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관계 강화, 주정부의 기관 및 기능 간소화 등등이다(OECD, 2015). 이것이 신생 광역시 개발을 목표로 SIE 2014-20 기금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가 광역시운영 프로그램*의 탄생배경이다.

우선 취약 근린지역에 대하여 일련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건 프로그램(*URBAN I 1994-1999; URBAN II 2000-2008*)을 통한 통합된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위 "복합프로그램"(*Priu, PRU, Contratti di Quartiere, PRUSS*)으로 불리는 추가 프로그램도 시행되었다. 최근 입안된 복합 프로그램은 경쟁력과 화합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의 촉매로서 도시의 역할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도시 및 지역 개발방식 장려를 목표로 한다(*SISTeMA - Porti&Stazioni- PUM*). 이외에도, "지역 실행계획"을 특히 중시하여 성장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부문 개입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부처간 도시정책위원회가 국가 수준에서 도시정책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7일 법률 134호에 의해 구성되었다.

1. 정책수립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부처간 업무영역 및 계획활동간의 상충 관계
2. 무질서한 도시확장 현상, 지역적인 혼잡 및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필요성
3. 보유주택의 수리 및 개축절차의 유지 및 전략적 관리(OECD, 2015).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두 건의 안정화법(2014 법률 190호 및 2015 법률 208호)을 통하여 빈곤 도시지역과 변두리지역을 대상으로 두 가지의 국가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참고 문헌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Italy", unpublished.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일본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공간전략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5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국가공간계획
선행/부차적 정책	도시부흥특별조치법(2002년 시행, 2016년 개정), 미래도시계획(2011)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관련 정보 없음.
실행 기관	내각실, 국토교통관광성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의 참여

현행 국가도시정책

국가공간전략(2015)은 도시와 광역시를 위한 목표를 포함한다. 지역의 활성화 촉진, 다층적이고 탄력적인 소규모의 네트워크화된 구조 지원, 도쿄의 과밀 해소를 통한 광역시로의 재편이 동 전략의 기본적인 국토관리개념의 핵심요소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독특한 지역사회 육성
2. 다양한 광역시 지역 개발
3. 세계와의 상호교류 증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일본 국토교통성, 2015).

국가공간전략에는 국가공간개발종합계획(일본 국토교통성, 2014)에서 도출된 토지개발에 관한 장기적인 원칙과 관련부처가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조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OECD, 2015).

공간전략 이외에도 기타 다양한 국가 수준의 도시개발 관련정책들이 지속가능한 건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간소한 도시정책, 효율적인 교통체계, 민간부문 참여, 환경영향 경감, 노령사회, 재난관리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OECD, 2015). 이러한 정책에는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지역의 주거환경과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시행된 도시부흥특별조치법도 포함된다(OECD 2015; 일본 수상, 2004). 동 법은 도시의 국제경쟁력과 재난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농촌지역 도시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2016년에 개정되었다. 미래도시계획(2011) 또한 도시의 거주 적합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Dodson 외,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국가공간전략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적당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2015년 국가공간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15), *National Spatial Strategy*, www.mlit.go.jp/common/001127196.pdf(accessed 9 June 2016).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2014), *Grand Design of National Spatial Development towards 2050*, Japan, 4 July 2014 www.mlit.go.jp/common/001088248.pdf(accessed 9 June, 2016).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Japan", unpublished.

Prime Minister of Japan(2004) "Basic Policies for Urban Renaissance", website of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16 April 2004, Tokyo, http://japan.kantei.go.jp/policy/tosi/kettei/040416kihon_e.html(accessed 9 June 2016).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토종합계획(CNTP)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1972년부터 시행, 제4차 CNTP 시행기간: 2000-2020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행정지도
선행/부차적 정책	지역개발계획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의 연구 및 토의
실행 기관	국토교통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CNTP에 규정된 지역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실행

현행 국가도시정책

국토종합계획(CNTP)은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토지이용, 국토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에는 개략적인 미래상과 함께 장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인 개발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며, 인구재편, 산업배치, 사회기반시설 구축, 생활환경 개선, 국토 자원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시행기간은 20년이다. 2011년 개정된 제4차 CNTP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된다. 동 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 친환경 국토, 개방된 국토 및 통일된 국토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광범위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X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2), "The four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the version modified", 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1775(accessed 5 October 2016).

라트비아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2030년까지의 라트비아 지속가능 발전전략, 2014-2020 국가개발계획, 2019년까지의 지역정책 지침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0, 2012, 2013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라트비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2030 및 2014-2020 국가개발계획은 국회가 승인한 국가 전략개발계획의 최상위 문건으로서 제정법의 지위 보유.
선행/부차적 정책	교통개발지침 2014-2020, 국가산업정책지침 2014-2020, 사회복지개발지침 2014-2020 등의 특정 부문정책 계획문건에서 도시정책문제를 다룸.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상기 모든 문건은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참여방식 접근방법에 따라 입안되었다.
실행 기관	환경보전지역개발부, 해당부처, 계획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정부 체제	부분적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환경보전지역개발부 산하의 지역개발 규제기관인 국가지역개발청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환경보전지역개발부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정책을 조정. 환경보전 지역개발부 및 관련부처의 대표자,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지역개발계획, 투자계획 평가.

현행 국가도시정책

라트비아에는 명시적 국가도시정책이 없다. 도시정책은 다음의 개발계획 문건에 명시된 포괄적 국가 지역개발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1. 2030까지의 *라트비아 지속가능 발전전략*(라트비아 의회가 2010년 승인한 라트비아의 주요 장기 국토개발계획 문건)
2. *라트비아 국가개발계획 2014-2020* (라트비아 의회가 2012년 승인한 라트비아의 주요 중기 국토개발계획 문건)
3. 2019년까지의 *지역정책지침*(내각이 2013년 승인한 중기 정책계획 문건)

국가지역정책에는 전국의 주요 9개 도시 개발센터와 지방의 주요 21개 소도시(도시-농촌 지방자치단체 소속) 개발센터로 구성된 개발센터 네트워크가 지정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기존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중심적 주거구조의 “중추”로 간주되고 있다. 도시와 소도시의 네트워크는 국가 장기전략 수립과정에서 지역의 계획표를 고려하고, 주거지역의 규모, 개발지표 및 잠재력, 서비스 제공량, 서비스 지역과 위치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가까운 도시와 소도시간의 거리는 25-90km로 이는 일반적으로 개발센터가 50km이내에 위치함을 의미한다(몇 군데는 예외). 이러한 센터에는 전 인구의 71%, 고등교육기관의 100%, 기업의 84%, 고용인구의 81%, 해외직접투자의 80%

이상 등 성장에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활동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라트비아는 현재 수도 주변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개발 잠재력이 있는 전국에 산재한 센터에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0개의 대도시 및 소도시가 전국 및 지역의 주요 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이러한 도시지역에 특정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상기 도시와 소도시는 자체적인 통합 지역개발전략에 따라 발전에 가장 중요한 투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2030년까지의 라트비아 지속가능 발전전략, 2014-2020 국가개발계획, 2019년까지의 지역정책 지침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적당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2030까지의 라트비아 지속가능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X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Cross-Sectoral Coordination Centre (CCSC) (2012),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4-2020*, www.pkc.gov.lv/images/NAP2020%20dokumenti/NDP2020_English_Final.pdf.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2013) *Regional Policy Guidelines until 2019*, www.varam.gov.lv/lat/pol/ppd/?doc=20773 (accessed 14 February 2017).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2010),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of Latvia until 2030*, www.varam.gov.lv/lat/pol/ppd/?doc=13857 (accessed 14 February 2017).

룩셈부르크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공간계획 종합프로그램(<i>Programme Directeur d'Aménagement du Territoire</i>) 또는 PDAT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03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법적 구속력 있는 정부 결정
선행/부차적 정책	통합 교통 및 공간계획 구상 2004(<i>Concept intégré de transports et du développement spatial pour le Luxembourg</i>) 또는 IVL,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종합전략 2012(<i>Stratégie globale pour un mobilité durable</i>) 또는 MODU
발전 단계	실행/감시 및 평가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정부 결정
실행 기관	지속가능개발기반시설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국가 공간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정부부처, 지방기관의 대표자와 전문가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간계획 실행과정 지도.

현행 국가도시정책

룩셈부르크에는 명시적인 국가도시정책이 없지만, 국가 공간계획인 2003 *공간계획 종합프로그램(PDAT)*에서 도시정책 문제를 다루고 있다. "생활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일반지침과 목표 우선순위를 동 프로그램에서 결정한다. PDAT는 2018년 개정될 예정이다(OECD, 2015). 2004년 수립된 *통합 교통 및 공간계획 구상(IVL)*에는 PDAT에 명시된 주요 목표의 실행지침과 룩셈부르크의 다중심적 도시공간모델이 보다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PDAT는 다수의 목표가 포함된 세 가지의 정책분야를 지향하고 있다.

1. **도시 및 농촌 개발.** 지속가능한 공간개발, 도시-농촌간 제휴, 다중심주의 또는 "집중된 분산"과 관련된 목표 포함.
2. **교통 및 통신.** 교통체증 해소,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목표 포함.
3. **환경 및 자연자원.**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자원관리, 생태계 서식 네트워크 보존과 관련된 목표 포함(룩셈부르크 내무부 공간계획, 2005).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종합전략(MODU)*은 룩셈부르크의 지속가능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통합 접근법을 제시하며, PDAT와 IVL을 보완한다.

룩셈부르크 공간계획의 주된 특성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다. 임의 회의체인 정부-지방자치단체간 지역협력 협의회(*Conventions de Coopération Territoriale État-Communes*)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양한 단계의 협력을 촉진한다. 각 협의회는 구성원들은 통합 개발전략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부기관(부문별 부처) 및 지방기관 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간개발과정을 지도(아이디어 개발, 조사와 연구 시행, 구체적 사업 실행)해 나간다(OECD, 2015).

감시와 평가도 공간계획에 포함되며 2004년 IVL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2008년에 완료된 IVL의 최초 평가에는 다중심주의, 기능적 다양성, 도시밀도, 유동성 및 자연환경과 관련된 29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공간개발 감독청(*Observatoire du Développement Spatial, ODS*)은 동 지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룩셈부르크 공간개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다수 발간하였다(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프라 룩셈부르크 관리부, 2014).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공간계획 종합프로그램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적당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2003년 PDAT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 Luxembour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patial Planning (2005), *A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 for Luxembourg: The major aspects of the national spatial planning programm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patial Planning, Spatial Planning Department, Luxembourg, www.dat.public.lu/publications/documents/programme_directeur_light/prog_dir_li_gh_t_uk.pdf (accessed 13 June 2016).
- Luxembourg 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2014), "Monitoring IVL", webpage of the 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Department of Territorial Development, Luxembourg, http://www.dat.public.lu/strategies_territoriales (accessed 13 June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Luxembourg", unpublished.

멕시코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도시개발계획 2014-2018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4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완전한 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적 목표, 전략 및 우선순위를 규정한 전략 문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과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선행/부차적 정책	국가주택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Vivienda 2014-18)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관련 정보 없음.
실행 기관	농업국토도시개발부(SEDATU)
정부 체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SEDATU는 멕시코의 일반 국가기관임.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멕시코의 국가도시정책은 국가개발계획 2013-2018에 대응하는 국가도시개발계획 2014-2018에 규정되어 있다(OECD, 2015). 국가도시개발계획은 다음의 여섯 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존 도시 합병.
2.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 모델 통합.
3. 토지이용 관리를 위한 규범, 예산, 행정 및 규제수단의 강구 및 실행.
4. 도시여행의 품질, 편의성, 연결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장려.
5. 위험지역 거주제한,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민의 취약성 해소.
6. 지방경제의 역량과 잠재력에 기초한 국가 지역정책의 통합(SEDATU, 2014).

이들 목표가 추구하는 바는 거버넌스의 개선을 포함한 조정력 향상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공급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Dodson 외, 2015).

국가도시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주택정책은 국가주택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vivienda) 2014-18을 통해 규정한다. 동 프로그램은 부처간 협력 증진,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개발 모델로의 전환, 주택격차 해소,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OECD, 2015).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역제전략 적용여하에 따라 자원과 주택투자를 배분하면서 두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Dodson 외,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국가도시개발계획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적당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당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국가도시개발계획 2014-2018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X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Mexico", unpublished.

SEDATU(Mexican Ministry of Agrarian, Territorial and Urban Development) (2014), *Programa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 2014-2018 (National Urban Development Programme 2014-2018)*, 30 April 2014, SEDATU, Mexico

City, www.sedatu.gob.mx/sraweb/datastore/programas/2014/PNDU/PROGRAMA_Nacional_de_Desarrollo_Urbano_2014-2018.pdf (accessed 13 June 2016).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네덜란드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i>네덜란드 도시의제(Agenda Stad)</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현재 공식화 중 - 2015년 6월 하월에 초안 제출.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해당 없음.
선행/부차적 정책	<i>사회기반시설 및 공간계획을 위한 국가정책전략(SVIR), 2012</i>
발전 단계	공식화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중앙정부, 도시 및 광범위한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
실행 기관	사회기반시설환경부, 경제부와 협력, 내무부가 실행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도시 협정에 의한 실행 메커니즘 제안

현행 국가도시정책

네덜란드에는 국가도시정책이 없으나, 내무부가 사회기반시설환경부, 경제부 외 4개 부처와 협력하여 *네덜란드 도시의제(Agenda Stad)*를 조정하고 있다(OECD, 2015). 의제는 경제성장, 네덜란드 도시의 삶의 질과 혁신을 촉진할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도시가 성장하고 차별화하며 해결책을 강구할 자원과 조절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 제거.
2. 도시가 행정구역을 넘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내 및 도시간 협력
3. 데이터, 에너지 및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 조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을 유치할 혁신여건 조성(Agenda Stad, 2016).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도시의제*를 개발하고 있다(Agenda Stad, 2016). *네덜란드 도시의제*의 실행수단은 시와 민관 이해관계자가 입안한 뒤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체결하는 *도시협정*이다.

*사회기반시설 및 공간계획을 위한 국가정책전략(SVIR)*은 2012년 사회기반시설환경부가 공표하였으며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이와 관련된 공간계획명령(BRO)에는 기존 도시 또는 근처 여러 교통수단 내에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3“단계“의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화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OECD, 2015).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중앙정부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27개 도시의 취약 근린지역을 대상으로 대도시(*Grotestedenbeleid*)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고 참여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분산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전국의 40개 취약 근린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목표지역의 취업, 교육개선 주택정책(Wijkaanpak)*으로 대체되었으나, 2010년 정권교체로 중단되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도시의제는 도시와의 협력과 도시개발 연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은 변경될 수 있다.

암스테르담 조약(유럽연합을 위한 도시의제 설정)은 2016년 5월30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연합 도시문제 담당장관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유럽연합 도시의제는 규제, 재원조달, 지식(지식 기반과 교환)의 향상을 위해 도시관련 기관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정책(통합된)과 다양한 수준의 정부간의 공동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제휴가 유럽연합 도시의제 내 12개 우선주제에 관한 권고사항의 이행을 통하여 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주된 실행 메커니즘으로 인식되었다.

참고 문헌

- Agenda Stad (2016), "About Us", Agenda Stad website, <http://agendastad.nl/about-us/>(accessed 13 June 2016).
- Dutch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2015), "Government to strengthen urban areas through City Deals",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webpage, 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infrastructure-and-the-environment/news/2015/06/26/government-to-strengthen-urban-areas-through-city-deals(accessed 13 June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Netherlands", unpublished.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뉴질랜드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i>도시개발역량에 관한 국가정책 연명</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공식화 중임. 2016년 11월 발효 예상.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행정지도를 수반한 행정명령
선행/부차적 정책	<i>국가 도시설계원칙(2005)</i>
발전 단계	공식화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이해관계자 참여(1991년 자원관리법에 따른 공식 입법절차)
실행 기관	지방정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단 실행주체는 지방정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지방정부. 단, 개발역량 평가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 및 유틸리티 공급자와 협업.

현행 국가도시정책

현재 뉴질랜드의 도시정책은 “부분적”이며 광범위한 제정법과 정책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건설주택부는 *도시개발역량에 관한 국가정책 연명*을 개발하고 있다. 동 문건은 2016년 11월에 공표될 예정이다(OECD, 2015). *도시개발역량에 관한 국가정책 연명*을 통하여 지방정부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 단기 및 중장기 수요충족을 위한 주택과 사업개발에 충분한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정책 연명*은 다음의 다섯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1.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조장하고 그 효과를 관리.
2. 주택용 및 상업용 토지 수요 충족.
3. 경쟁적 토지 및 개발시장에 대한 이해와 조장.
4. 토지이용계획과 사회기반시설과의 조정 개선.
5. 협의회간의 협력적 역할과 관계 정립(뉴질랜드 환경부 및 사업 · 혁신 · 고용부, 2016).

일곱 가지 중요한 목표를 통해 의사결정의 결과와 근거를 개선하고, 의사결정과 근거 기초를 조정하며, 보다 공감가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할 정책은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할 것인지, 중간 및 고도 성장 도시지역에만 적용할 것인지 또는 고도 성장 도시지역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뉴질랜드 환경부 및 사업 · 혁신 · 고용부, 2016).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부분적 도시정책은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정법의 일부로서 구현된다. 이러한 제정법에는 자원관리법, 지방정부법, 지방정부 오클랜드 수정법, 육상교통관리법 등이 포함된다.

2013년 주택협정 및 특별주택지역법에 의하여 주택이 부족한 지역의 지방정부는 자원관리법에 따른 의사결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택지개발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도시설계원칙*은 고품질의 도시설계계획을 통하여 뉴질랜드의 소도시와 도시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공공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약이다(OECD, 2015). 동 원칙은 프로그램이 협업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Dodson 외,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상정된 도시개발역량에 관한 국가정책 언명(협의 문건)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저조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당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상정된 도시개발역량에 관한 국가정책 언명(협의 문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 New Zealand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and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2016), *Proposed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 Capacity: Consultation Document*,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Wellington, www.mfe.govt.nz/sites/default/files/media/Towns%20and%20cities/Proposed%20NPS%20Urban%20Development%20Capacity-consultation-document-final.pdf (accessed 13 June,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New Zealand", unpublished.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노르웨이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부분적 또는 명시적 국가도시정책 없음.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해당 없음.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해당 없음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해당 없음.
선행/부차적 정책	그로루드 계곡 개발계획(<i>Grovdalssatsingen</i>)(2007-2016) 및 지역수준 계획, 백서 "관대하고 안전하며 창의적인 오슬로 지역"(2006-2007)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해당 없음.
실행 기관	지방정부지역개발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해당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노르웨이에는 국가도시정책이 없다. 노르웨이의 정부조직은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수준의 정부부처가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례도 있다. 2006-2007 그로루드 계곡 개발계획(*Grovdalssatsingen*)은 극빈 지역인 그로루드 계곡(오슬로 지역 소재)의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오슬로 시가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또한 지방정부지역개발부는 보다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주를 창설하는 과정에 있다. 관련 백서는 2016년에 발간될 예정이다(OECD, 2015).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2007년, 지방정부지역개발부는 오슬로 지역에 대한 백서인 *관대하고 안전하며 창의적인 오슬로 지역 - 노르웨이 수도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방정부지역개발부는 동 문건에서 차별화된 지역정책과 오슬로를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동 문건에서는 경제와 기업, 생활여건, 환경, 복지 연구 및 교육시설, 다양성과 관용, 아동보호와 학교, 안전, 문화 및 혁신을 망라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적용되었다(노르웨이지방정부지역개발부, 2007).

참고 문헌

- Norwegian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2007), "A Tolerant, Secure and Creative Oslo Region", Report No. 31 (2006–2007) to the Storting, Introduction and Summary in English,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Oslo, www.regjeringen.no/contentassets/f184961ca7a948febe6ec79f686b43e3/engb/pdfs/stm200620070031000en_pdfs.pdf (accessed 14 June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Norway", unpublished.
- OECD (2007), *OECD Territorial Reviews: Norwa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38080-en>.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폴란드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도시정책 2023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5년 10월20일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장관협의회에서 승인
선행/부차적 정책	지역개발 국가전략 2010-2020: 지역, 도시, 농촌지역(2010년 채택), 국가 공간개발구상 2030(2011년 채택). 국가도시정책은 2013년 7월16일 장관협의회에서 채택된 2020년까지의 국가도시정책의 가정을 직접적인 기반으로 하여 입안되었다.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이해관계자 참여 - 참여 접근방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방정부(농촌 포함) 및 그 단체 및 지역, 도시지역, 정부부처, 단체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제적, 사회적 관계자간의 폭넓은 논의를 통한입안.
실행 기관	경제개발부(전신은 사회기반시설개발부). 단,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각 해당 부처 및 기관에 분산.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토의와 공개 협의. 정부기관(중앙부처 및 산하단체 및 기관 포함)의 소관업무에 포함된 구체적인 국가도시정책 규정은 해당기관이 지정된 국가도시정책 실행 방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직접적인 공약으로 간주되어야 함.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중시되어 도시 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음. 그러나 도시관련 사항은 개발 및 실행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주되어야 함. 지역정책의 실행에는 국가도시정책도 포함됨.

현행 국가도시정책

폴란드는 2015년에 중기 국가개발전략 및 지역개발 국가전략의 맥락에서 정부의 도시정책관련 활동을 규정한 국가도시정책을 수립했다. 국가도시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및 도시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용창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도시정책에서 진단된 문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목표달성에 기여할 다섯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모든 도시정책 담당자들은 시의 효율성, 압축성, 지속가능성, 일관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갖춘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 목표는 다음의 열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공간 개발.** 무분별한 도시 확장 저지, 일관성 있는 도시공간정책 보장 및 다기능적인 공간 창출 포함.
2. **시민 참여.** 개발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수준 토의 및 공개 협의 포함.
3. **교통 및 도시 이동성.** 대중교통 우선순위 설정 및 교통시스템 통합 포함.

4. **저탄소 및 에너지 효율.**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탄소 경제 장려 포함.
5. **재건.** 주택개선, 지식공유, 감시 및 평가와 아울러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환경적, 기능적 및 기술적 측면 포함.
6. **투자정책.** 도시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투자 실행.
7. **경제개발.** 지역특화사업, 혁신 장려 및 지방기업 육성 포함.
8.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적응.** 친환경 사회기반시설, 수질관리,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기존 개발지역의 재활용, 신규개발보다는 재개발 활용 포함.
9. **인구변동.** 노령화 및 도시인구 감소 대책 포함.
10. **도시지역 관리.** 기능적 도시지역 내의 다단계 거버넌스와 협력 포함.

국가도시정책은 중앙부처 및 기타 정부기관에는 직접적으로, 지방, 시, 시민, 비정부단체 및 전문가에게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며 국가,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실행된다. 전용 수단(유럽연합 기금 포함), 국가적 수단, 프로그램 및 부문 활동을 통해 국가도시정책을 지원한다.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2015년 11월18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는 지방정부의 자체 활성화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표준절차와 아울러 활성화 절차를 조직하고 가장 중요한 개념과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활성화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으로서 그 주된 목표는 빈곤지역의 삶의 질 개선이다.

새로운 **활성화법(201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투자에 기인한 지가상승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에 개발부담금 및 확대 부동산취득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통과된 **대도시연합회법(2015)**에는 대도시간 협력에 대한 법적 체계가 설정되어 있다.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지금까지 지역개발을 위한 비전과 정책수단을 규정한 **지역개발 국가전략**, 국가 개발정책을 규정한 **중기 국가개발전략**, 성장 및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국가전략 참조체계 2007-2013**,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사용을 규정한 **국가결속전략** 등 다수의 정책 문건이 도시개발 문제를 다루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국가도시정책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광범위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2015년 국가도시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X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Poland", unpublished.

Polish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2015), "National Urban Policy2023", presentation, Lodz, 28 October 2015,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Development, Warsaw, www.vasab.org/index.php/documents/doc_download/974-polish-national-urban-policy-2023(accessed 14 June 2016).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포르투갈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지속가능한 도시 2020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5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국가적 원칙 및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유럽연합 제휴협정에 규정된 재원조달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선행/부차적 정책	도시정책 2007-2014, JESSICA 계획(2009)과 같은 유럽연합 도시계획 프로그램.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정부가 결정.
실행 기관	국토개발총국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포르투갈은 2015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국가적 원칙 및 지침인 *지속가능한 도시 2020(CidadesSustentáveis 2020)*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은 도시간(도심), 도시-지역(기능적 도시지역 및 도시-농촌 연결) 및 도시간(도시 네트워크)의 세 차원을 망라한다. 동 지침의 52개 전략적 지침은 다음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1. **세련됨과 경쟁력.** 연결성, 혁신 및 정보기술 포함.
2.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도시재건, 주택,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개발 및 도시-농촌 통합 포함.
3. **통합 및 인적자본.** 사회통합, 문화와 도시공동체 육성 포함.
4. **공간기반 거버넌스.** 지식공유 및 네트워킹 포함(포르투갈 국토개발총국 2015a; 2015b).

*지속가능한 도시 2020*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적 체계만 제시할 뿐 재원조달방식은 직접 다루지 않는다. 재원조달 및 실행은 '유럽연합 구조기금 및 투자기금 사용관련 유럽연합 제휴협정'과 관련규정에 체계화 되어 있다. 관련규정에는 '도시개발 전략계획', '통합지역투자', '주로 대도시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주도 지역개발(지역 운영프로그램)' 등이 있다(OECD, 2015).

지속가능한 도시 2020 체계는 국토개발총국(Direcção-Geral do Território)이 수립했다(포르투갈 국토개발총국 2015a; 2015b). *도시 주택 및 재건 연구소*가 주택 및

재건정책을 이행한다. 포르투갈은 *JESSICA 계획* 같은 유럽연합 수준의 도시계획도 2009년부터 다수 운영하고 있다. *도시환경개선계획(MCOTA)*, *디지털도시 프로젝트*, *도시재건계획 PRU* 등과 같은 다양한 유럽연합 재정지원 도시계획이 있으나, 대부분의 도시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포르투갈의 *도시정책(Política de Cidades)* 2007-2014는 국가수준에서 운영된 경제 및 공간 개발계획으로 지역 및 지방수준에서 실행되었다. 동 정책에는 혁신, 경쟁력, 통합 도시계획, 도시 거버넌스, 환경 및 사회통합 분야를 망라하여 폭넓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Dodson 외,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2020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적당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적당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지속가능한 도시 2020*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Portugal", unpublished.

Portuguese Directorate-General for Territorial Development (2015a), "The Portuguese Strategy for Sustainable Cities: towards smarter urban development", Presentation by Cristina Cavaco, Deputy Director General, GEOSPATIAL World Forum, 25-29 May 2015, Lisbon, http://www.dgterritorio.pt/static/repository/2015-06/2015-06-24145234_b511271f-54fe-4d21-9657-24580e9b70235D83BE99-238C-4727-83D4-712E7C3188A0577D3F30A-1776-4938-B176-55758DF662035file5pt51.pdf (accessed 14 June 2016).

Portuguese Directorate-General for Territorial Development (2015b), *Cidades Sustentáveis 2020* [Sustainable Cities 2020], www.dgterritorio.pt/ordenamento_e_cidades/cidades/cidades_sustentaveis_2020/ (accessed 14 June 2016).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슬로바키아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도시개발정책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형성중.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해당 없음.
선행/부차적 정책	국가 지역개발전략 2020
발전 단계	공식화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관련 정보 없음.
실행 기관	교통건설지역개발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해당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슬로바키아에는 아직 국가도시정책이 없으며 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및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운데 교통건설지역 개발부가 *도시개발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동 정책의 주된 요소는 살기 좋고 생산적인 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통합된 다중 거버넌스 접근방법이다. 국가도시정책은 기존의 행정체제 내에서 운영되며 도시는 자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책임지는 자치단위가 된다(OECD, 2015).

도시문제는 *국가 지역개발전략 2020*에서도 다루어진다. 중앙정부는 국가 수준에서 지역개발을 촉진할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지도하기 위해 2008년에 동 전략을 수립하였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슬로바키아 중앙정부는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지역사회에 대한 유럽연합 기금 집행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개발계획*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수립했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참고 문헌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Slovak Republic", unpublished.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슬로베니아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슬로베니아 공간개발전략(SDSS)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04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제정법(국회 승인)
선행/부차적 정책	공간계획법(2007)
발전 단계	실행/감시 및 평가. 2014년 SDSS 실행 평가 완료. 현재 SDSS 개정작업 중임.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참여 절차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한 참여방식 접근방법.
실행 기관	환경공간계획부가 국가수준 공간계획(국가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조정. 해당 사회기반시설 관장 부처가 절차를 개시하고 계약당사자가 계획 수립.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전략은 부처간 국가 수준에서는 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다른 부문정책과 국가공간계획(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간 구축을 위한)을 통해 실행되며, 지방 수준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환경공간계획부의 감독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지방자치단체 공간계획법(각 지방자치 단체의 강행규정)을 통해 실행됨.

현행 국가도시정책

슬로베니아에는 국가도시정책이 없으나, 2014년에 국회에서 채택된 슬로베니아 공간개발 전략(SDSS)에는 도시시스템의 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SDSS는 다중심적인 도시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적, 지역적으로 중요한 도시심지를 규정하고 있다(OECD, 2015). SDSS는 국가, 지역 및 지방수준에서의 공간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다음의 여덟 가지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1. **대등한 지위에서 슬로베니아의 유럽으로의 통합.** 유럽 도시네트워크 내에서의 슬로베니아 도시 및 소도시의 경쟁력 강화 포함.
2. **다중심적인 도시시스템 및 지역 공간개발.** 개발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 및 지방중심과 기타 도시중심의 지정 포함.
3. **활기차고 잘 관리된 도시 및 소도시.** 매력과 환경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 포함.
4. **광역 도시지역의 균형개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및 교통흐름 관리 포함.
5. **교통 및 주거 네트워크의 통합 및 균형개발과 공공 사회기반시설 건설.** 교통

네트워크 개발 포함.

6. **농촌 지역의 활력과 매력 증진.** 경제적 다각화 및 농촌지역 내 도시주거지역의 고용 창출 지원 포함.
7. **귀중한 자연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정가능성 향상.** 보존과 문화적, 도시적, 농업적 토지이용 간 균형 포함.
8. **특별한 잠재력과 문제를 보유한 지역의 공간개발.**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지역 및 자연재해 발생가능지역 파악 포함(슬로베니아 환경·공간계획·에너지부, 2004).

SDSS는 문화유산, 활성화, 사회기반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안전을 특히 고려한 충실한 관리와 계획을 통하여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 및 기타 주거지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건 및 활성화는 기존 도시지역의 주요 전략정책으로 간주된다. 도시 주거지역의 재개발, 빈곤 근린지역의 재건 및 안정화, 유휴지 및 용도변경 용지의 재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도시재건과 녹지와 공공용지를 이용한 사회적, 문화적 기반시설 개발 이외에도 SDSS는 짧고 편리한 출퇴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계층구조상 하부의 공간개발 행위(국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세부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 공간계획)는 다른 문건 (프로그램, 개발계획 등)뿐만 아니라, SDSS의 지침에도 부합하여야 한다(OECD, 2015).

2014년에 SDSS를 평가한 결과 도시재건 및 토지이용정책 분야의 주요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고, 지방 공간개발계획의 입안과 채택이 지연되었음이 밝혀졌다. 장애요인에는 지방수준의 공간계획 수립 역량 부족을 포함한 부문간 조정 부재, 조직변경, 법률 개정 및 자원 부족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는 정보공유, 공간계획의 촉진, 공공참여 증진의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OECD, 2015;슬로베니아 인프라·공간계획부, 2014).

공간계획법(슬로베니아 환경·공간계획·에너지부, 2007)도 도시주거에 대한 규제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적인 도시 토지이용 및 계획제도의 출발점의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동 법률의 목적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토지의 효율적 이용, 통합적인 도시재건 및 새로운 주거지 개발 전의 기존 도시지역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한 토지개발 우선순위 결정이 포함된다(OECD,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슬로베니아 공간개발전략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저조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저조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슬로베니아 공간개발전략(SDSS)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Slovenia", unpublished.

Sloven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Energy (2007), *Spatial Planning Act*,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Energy, Ljubljana, www.mop.gov.si/fileadmin/mop.gov.si/pageuploads/zakonodaja/en/prostorsko_nacrtovanje_en.pdf(accessed 16 June 2016).

Sloven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Energy (2004),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of Slovenia*,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Energy, Ljubljana, www.mop.gov.si/fileadmin/mop.gov.si/pageuploads/zakonodaja/en/sprs_eng.pdf(accessed 16 June 2016).

Slovenian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Spatial Planning (2014), *Analiza izvajanja v Strategiji prostorskega razvoja Slovenije predvidenih programov in ukrepov*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of Slovenia planned programs and measures], March 2014,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Spatial Planning, Ljubljana, www.mop.gov.si/fileadmin/mop.gov.si/pageuploads/podrocja/prostorski_razvoj/BF_A CER_Drugo_porocilo_SPRS.pdf(accessed 16 June 2016).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스페인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스페인 지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전략(Estrategia Española de Sostenibilidad Urbana y Local) 또는 EESUL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1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국가전략
선행/부차적 정책	주택계획(2005)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이해관계자의 참여
실행 기관	개발부
정부 체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스페인은 2011년, 국가도시정책인 *스페인 지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전략(Estrategia Española de Sostenibilidad Urbana y Local* 또는 EESUL)을 공표하였다(OECD, 2015). 동 전략에는 여섯 개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과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1. 도시형태 및 도시계획 수단. 도시활성화와 복합 이용 포함.
2. 접근가능성, 이동성 및 지속가능한 교통
3. 도시관리,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4. 건축 구조
5. 기후변화 저감 및 대응
6. 도시-농촌간 관계

이러한 주제를 지배하는 원칙에는 도시성장 관리, 교통과 토지이용계획의 통합, 수평적 및 수직적 거버넌스, 도시의 신지대사 및 환경영향 관리, 계획에 대한 토지 접근방법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스페인 개발부, 2011). 스페인에는 또한 *주택계획(2005)*을 포함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강력한 부문정책이 존재한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스페인 지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전략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적당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광범위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스페인 지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Spain", unpublished.

Spanish Ministry of Development(2011), *Estrategia Española de Sostenibilidad Urbanay Local* [Spanish Strategy on Local Urban Sustainability], www.fomento.gob.es/NR/ronlyres/1668CD1E-0B11-4C9E-84E2-E664DD3464C1/111503/EESULWEB2011.pdf(accessed 16 June 2016).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스웨덴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국가 플랫폼 외에 국가도시정책 없음.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해당 없음.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해당 없음.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해당 없음.
선행/부차적 정책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가 협의, 도시환경협정
발전 단계	해당 없음.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해당 없음.
실행 기관	환경에너지부가 도시문제를 관장하며 주택, 건축 및 계획 국가위원회 (Boverket)가 국가 플랫폼을 조정.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해당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스웨덴에는 국가도시정책은 없으나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계획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주요한 계획으로 2014년에 공표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국가 플랫폼*이 있다. 동 계획은 스웨덴 에너지청(Energimyndigheten), 스웨덴 환경보호청(Naturvårdsverket), 스웨덴 경제지역성장청(Tillväxtverket) 및 스웨덴 교통관리국(Trafikverket)과 함께 주택, 건축 및 계획 국가위원회(Boverket)가 조정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과 계층의 참가자들간의 협력, 조정,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동 플랫폼의 목표 중의 하나다. 중점 항목 중 하나는 부문간 조정의 개선이다. 플랫폼은 또한 지역 구조기금 프로그램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력도 지원한다. 플랫폼은 무기한 사업이다(Boverket, 2015; OECD, 2015).

기타 국가 도시계획에는 스톡홀름, 예테보리 및 말뫼를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가 협의*가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투자계획("도시 환경협정")도 발표했으며 현재 관련 부처가 입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취약 주거지역의 아파트 건물을 개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OECD, 2015)

환경에너지부가 도시개발을 감독한다. 그 역할에는 정부 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조정이 포함된다. 지역정책을 포함하여 주택, 계획 및 건축분야의 보조금 관리와 계획 및 건설관련 법률과 규정은 기업혁신부가 관장한다.

2015년 공표된 스웨덴의 지역정책인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위한 스웨덴 국가전략*은 투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체계가 될 것이다. 동 전략은 스웨덴 전국의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체계를 제공하며 공간기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실행인자(enabling factors)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 지역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은 도시지역을 포함한 지역투자를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목표는 보다 강한 지방 및 지역 경쟁력을 갖춘 전국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스웨덴 정부, 2015).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수도권정책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이주민의 통합 및 빈곤지역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이었다.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을 실행하였다. 동 전략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도시지역에서의 소외 최소화였다(유엔인간정주계획, 2015).

참고 문헌

- Boverket (Sweden National Board of Housing and Planning) (2015), "Platform for Sustainable Cities", 3 December 2015, Boverket, Karlskrona, Sweden, www.boverket.se/en/start-in-english/planning/platform-for-sustainable-cities/ (accessed 16 June 2016).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5), *Sweden's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Regional Growth and Attractiveness*, 25 April 2015. <http://www.government.se/information-material/2016/04/swedens-national-strategy-for-sustainable-regional-growth-and-attractiveness-20152020---short-version/>, (accessed 16 June 2016).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Sweden", unpublished.
-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스위스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i>연방 집적정책 2016+</i>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5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연방의회가 채택
선행/부차적 정책	<i>연방 집적정책(2001)</i>
발전 단계	실행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중앙정부가 지방 및 지역기관 및 관계자와 협력하여 개발.
실행 기관	연방 공간개발청(ARE), 국가 경제사무국(SECO)이 기타 연방부처와 공동으로 실행.
정부 체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연방 행정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다양한 부문 및 부문간 정책의 특정 과제에 대한 재정지원(예를 들면, 교통과 도시개발의 조정, 지역수준의 경제활동) 및 국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공포된 규정에 기초한 실행.

현행 국가도시정책

스위스는 2001년 *연방 집적정책* 수립 이래 국가도시정책을 운용해 왔다. 2015년 2월18일 스위스 연방의회는 향후 10년에 대한 새로운 전략(*연방 집적정책 2016+*)을 채택하였다. 공간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 정책을 농촌지역 정책과 함께 운영했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주, 시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공통전략을 기초로 개정판을 입안하고 있다. 동 정책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적을 올리고 도시, 소도시와 농촌지역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OECD, 2015).

*연방 집적정책 2016+*의 주요 목표는 삶의 질 향상, 경제력 향상, 양질의 도시개발 및 효율적인 협력이다. 이러한 목표는 다음 여섯 개 주제를 통하여 달성된다.

1. **기능적 공간에 있어서의 정치적 거버넌스.** 수직적, 수평적 및 다부문 협력 강화 포함.
2. **도시화와 교통의 조정.** 효율적인 조정과 개발에 집중.
3.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공공용지 개발.** 도시적 삶의 질에 대한 공공용지의 중요성 인식.
4. **사회적 통합 강화.** 다양한 인구집단의 통합 촉진.
5. **경쟁력 강화.** 다각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 조건을 제공하는 집적의 중요성 인식.

- 6. **재정지원 및 특별비용 보상.** 도시중심이 지역에 기여하는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스위스 연방협의회, 2015).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2001년 연방 집적정책은 연방 집적정책 2016+으로 대체되었다.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연방 집적정책 2016+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광범위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적당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연방 집적정책 2016+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X

참고 문헌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Switzerland", unpublished.

Swiss Federal Council (2015), *Politique des agglomérations 2016+ de la Confédération: Pour un développement cohérent du territoire suisse*, 18 February 2015, Swiss Federal Council, Berne, www.are.admin.ch/dam/are/fr/dokumente/agglomerationspolitik/agglomerationspolitikdesbundes2016.pdf.download.pdf/politique_des_agglomerations2016de laconfederation.pdf (accessed 20 June 2016).

UN-Habitat (2017, forthcoming), "NUP Regional Report: Western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Nairobi: UN Habitat.

터키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통합 도시개발전략 및 실행계획 2010-2023(KENTGES)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0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명시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국가전략
선행/부차적 정책	도시전환법(2012), 대도시 지방자치법(2014)
발전 단계	실행/감시 및 평가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이해관계자의 참여
실행 기관	터키 환경도시화부
정부 체제	중앙집권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일반 국가계획기관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관련 정보 없음.

현행 국가도시정책

터키의 국가도시정책은 *통합 도시개발전략 및 실행계획 2010-2023(KENTGES)*이다. 2010년 채택된 KENTGES는 도시화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이 잡힌 살기 좋은 도시개발을 위한 원칙, 전략 및 조치를 다음의 세 주제로 제시한다.

1. **공간계획 시스템의 개편.** 시스템의 강화, 관련 기관간의 조정 개선, 역량 축적 포함.
2. **주거공간과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및 교통,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공간계획의 통합, 중심업무지구와 근린지역의 활성화, 사회복지의 균형 배분, 공공용지 및 문화적, 역사적 공간의 보존, 자연재해 위험 경감 및 안전기준 제정 포함.
3. **주거지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 강화.** 농촌 주거지 강화를 통한 농촌-도시간 이주 관리, 도시의 연대, 통합 및 포용력 증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제공 및 공간계획 과정에의 시민참여 보장 포함(터키 공공사업 · 인간정주청, 2010; OECD, 2015).

KENTGES의 개발은 2009년에 개최된 도시화 협의회 회의로부터 시작되었다. 151개 기관의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10개의 개별위원회가 모여 터키의 도시개발과제를 발굴하여 2023년까지의 의제를 설정하였다. 최고회의가 2010년 채택한 보고서인 *KENTGES 통합 도시개발전략 및 실행계획(2010-2023)*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시화와 계획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 고속성장과 도시 재난위험관리를 위한 2011년 환경도시화부 신설, 2012 도시전환법 제정 및 2014년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지방 경계까지 확장시킨 *대도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법률적 개혁이 뒤를 이었다(터키

공공사업 · 인간정주청, 2014).

터키 HABITAT-III 국가보고서(2014)에서 KENTGES 실행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도시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공간계획에 대한 조정과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그 결과 농촌-도시간 이주 및 도시의 공간 분리가 가속되었다. 반면에, KENTGES의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시스템 구축” 목표는 실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터키 공공사업 · 인간정주청, 2014).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통합 도시개발전략 및 실행계획 2010-2023(KENTGES)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광범위함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광범위함
기후변화 대응	적당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터키의 통합 도시개발전략 및 실행계획 2010-2023(KENTGES)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X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X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Turkey", unpublished.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2014), *Turkey HABITAT VIII National Report*, December 2014, Ministry of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Ankara, <http://unhabitat.org/wp-content/uploads/2014/07/Turkey-national-report.pdf> (accessed 20 June 2016).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Settlement (2010), *KENTGES: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Strategy and Action Plan*, 4 November 2010,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Settlement, Ankara, www.kentges.gov.tr (accessed 20 June 2016).

영국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도시 및 지방정부 권한이양법(도시 협정)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16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부분적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제정법 및 행정지도
선행/부차적 정책	도시 협정(2011-2015), 도시생활 실행계획(2014-2015)
발전 단계	감시 및 평가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도시 협정은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와 해당 정부부처 및 수혜도시간의 협상에 의해 체결.
실행 기관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정부 체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로 구성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국가도시정책 없음. 두 중앙부처(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와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가 도시정책을 전담.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중앙-지방간 조정을 포함한 다수 정부부처/기관 참여.

현행 국가도시정책

영국에는 명시적인 국가도시정책이 없지만, 2011년부터 잉글랜드의 도시와 기타 자치정부의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협정을 통해 도시정책의 분권화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2016 도시 및 지방정부 권한이양법에는 도시협정에 대한 법적체계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도시협정에 따라 잉글랜드 도시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맞춤형” 권한이양을 할 수 있다. 동 협정에 따라 수평적(부처간), 수직적(센터와 도시간) 조정과 지방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러한 협정에 의거 도시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된다.

1. 해당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
2. 기업육성을 위한 자체전략 수립.
3. 경제성장 달성.
4. 공적자금의 집행방법 결정.

도시협정은 기관간 조정 및 도시계획의 핵심동인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위상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Dodson 외, 2015).

2011년과 2012년에 걸친 1차 도시협정은 “핵심도시”로 명명된 런던 외곽의 8개 잉글랜드 대도시를 대상으로 체결되었다. 2차 도시협정은 그 다음으로 큰 런던 외곽의 14개 대도시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6개 도시를 포함한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체결되었다.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제휴인

도시지방 성장협의회의 지원 하에 이러한 도시들은 해당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을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체결하였다. 2015년 5월, 선거 후 새로운 권한이양 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포함하여 2015년 9월 마감시한까지 영국 전역의 도시, 소도시 및 군 지역에서 38건의 권한이양 협정이 접수되었다(OECD, 2015). 이중 8건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체결되었다(영국 정부, 2016a).

2016년 2월, 의회는 *도시 및 지방정부 권한이양법 2016*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목적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체계를 규정하고 2015년에 제안된 도시협정의 2016-17년 중 체결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동 법에 따라 일부 도시에 더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고 광역시 시장 선출을 위한 체계가 수립되었다(영국커뮤니티·지방자치청, 2015; 영국 정부, 2016b). 자치정부 내에서 영국정부와 자치정부는 에버딘, 카디프 수도권, 글래스고우 및 클라이드 벨리, 인버네스 및 하이랜드와 체결된 인상적인 협정과 곧 체결할 예정인 테이사이드와스털링과의 협정을 포함한 도시 협정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다(영국 하원도서관, 2016a).

현행 도시정책의 적용분야

부문	도시 협정의 부문별대표성
경제발전	광범위함
공간구조	저조함
인간개발	적당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조함
기후변화 대응	저조함

현행 국가도시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

영국의 도시 협정(2016년 도시 및 지방정부 권한이양법을 기반으로 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정책 기준	정책에 반영 여부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	X
지역 접근법 장려(특히 도시-농촌 연계)	X
도시 시스템(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및 도시간 연결에 대한 고려	X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계획(공공장소 포함)	X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	
효과적인 도시관리시스템(수평적 조정 및 수직적 제휴) 개발	X
효과적인 도시재정 시스템 장려	X
도시간의 제휴 및 협력 지원	X
과정과 결과의 포괄성 및 참여 보장(불평등, 차별, 안전 등)	X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도시 규모 데이터 확보	

참고 문헌

-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6a), "City Deals and Growth Deals", updated 26 May 2016,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website, London, www.gov.uk/government/policies/city-deals-and-growth-deals?page=1 (accessed 21 June 2016).
-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6b),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28 January 2016, Act of Parliament,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London, www.legislation.gov.uk/ukpga/2016/1/contents/enacted/data.htm (accessed 21 June 2016).
- House of Commons Library (2016a), "City Deals", *Briefing Paper*, No. 7158 (2016), 24 August 2016,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7158/SN07158.pdf>.
- House of Commons Library (2016b), "Devolution to local government in England", *Briefing Paper*, No. 07029, 19 July 2016,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7029/SN07029.pdf>.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United Kingdom", unpublished.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 "Landmark devolution bids submitted from right across the country", Policy webpage, 11 September 2015,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London, www.gov.uk/government/news/landmark-devolution-bids-submitted-from-right-across-the-country (accessed 21 June 2016).

미국

국가도시정책의 명칭	국가도시정책은 없지만, 강한 도시, 강한 지역사회(SC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휴, 근린지역 활성화계획 등의 공간기반 정책 시행.
국가도시정책 시행일	2009
명시적 또는 부분적 구분	해당 없음.
법적 지위(예를 들면 제정법, 행정명령, 행정지도)	해당 없음
선행/부차적 정책	행정명령 13602호에 의한 강한 도시, 강한 지역사회, 2012, 행정명령 13503호에 의한 백악관 도시국, 2009.
발전 단계	해당 없음.
개발 방식(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법률에 근거)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입법화 및 지방주도의 실행.
실행 기관	주택도시개발부가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계획을 관리.
정부 체제	연방
국가도시정책기관의 유형	해당 없음
실행 메커니즘(예를 들면, 위원회, 복수의 기관 참여, 국가-지방간 조정)	다양한 기관의 참여, 중앙-지방 조정.

현행 국가도시정책

미국 연방정부는 도시개발 및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을 시행해왔다. 현행 행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이끌고 도와주며 대도시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도시정책에 정립했다. 계획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과 전략에 통합, 유연성 및 책임을 부여하였다. 대표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강한 도시, 강한 지역사회(SC2) 계획**은 취약한 도시의 경제개발목표 달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수립되었다. SC2와 관계기관들은 공동으로 취약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연방정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과 투자를 조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의 20개 지역사회 및 지역에서 SC2를 운영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휴(PSC)**를 통하여 근린지역의 번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직장 인근에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오염을 줄이기 위한 연방 주택, 교통, 물, 기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조정한다. 제휴기관인 교통부(DOT), 주택도시개발부(HUD) 및 환경보호청(EPA)은 i)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ii) 공평하고 저렴한 주택개발 촉진, iii) 경제적 경쟁력 향상, iv) 기존 지역사회 지원, v) 연방정책과 투자의 조정 및 관리, vi) 지역사회와 근린지역의 존중 등의 여섯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 **근린지역 활성화 계획**은 지방지역사회가 빈곤 근린지역을 활성화하여 기회의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간기반 전략을 집행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에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백악관, HUD, DOE, 법무부(DOJ), 보건복지부(HHS) 및 재무부가 참여하는 부처간, 기관간 제휴다. 참여기관들은 기존의 4개 프로그램(*우량 근린지역*, *약속의 땅*, *번 형사제도 혁신 및 지역보건소*)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백악관 근린지역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미백악관, n.d.b).

- *우량 근린지역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약계층이나 HUD의 지원을 받는 주택이 소재하는 빈곤 근린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전략을 포괄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지원한다. 동 프로그램은 유흥재산, 주택, 공공시설 및 학교를 포함한 근린지역 자산의 시급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우량 근린지역*은 물리적인 개선을 통해 폐허가 된 공공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희망 IV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정책이다. 동 프로그램은 근린지역에 더 중점을 두면서 재건축 계획에 민간개발을 포함시켜 *희망 IV*의 적용범위를 확장시켰다.
- *약속의 땅*은 극빈 도시, 농촌 및 소수민족 지역사회를 지정하여 고용창출, 투자유치, 경제활동 촉진, 교육기회 확대 및 범죄발생을 저감을 위한 민간 및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이다. 연방정부는 선정된 지역사회에 대하여 *약속의 땅* 프로그램의 자원 및 기술 접근을 제휴를 통해 지원한다. 2015년 현재 12개 기관이 37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적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미국 주택·도시개발청, n.d.b).

선행 국가도시정책 및 변천과정

백악관 도시국은 연방정책에 대하여 주 및 대도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13503호에 의거 2009년에 창설되었으며 백악관 국내정책협의회의 임무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정보는 전 기관과 백악관을 대상으로 조정을 하는 관계로 거의 입수할 수 없다(Dodson 외, 2015; 미백악관, n.d.b). 과거정권들은 부분적인 도시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세혜택 등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투자는 등한시하였다. 주로 주택구입능력 증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참고 문헌

- Couch, L. (2014), *Public Housing: Choice Neighborhoods Initiatives and HOPE VI*, Advocate's Guide,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Washington, DC.
- OECD (2015), "Regional Outlook Survey Results: United States", unpublished.
- UN Habitat (2017, forthcoming). *A Consolidated Report of Regional National Urban Policy Reviews (Africa, Arab States, Asia and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airobi: UN Habitat.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n.d. a), "Promise Zones Overview", HUD webpage, Washington, DC,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comm_planning/economicdevelopment/programs/pz/overview(accessed 15 July 2016).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n.d. b), "Promise Zones", HUD webpage, Washington, DC,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comm_planning/economicdevelopment/programs/pz(accessed 15 July 2016).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n.d. c), "Choice Neighborhoods", HUD webpage, Washington, DC,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public_indian_housing/programs/ph/cn(accessed 18 July 2016).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15), "About Us", 2 March 2015, Partnership for Sustainable Communities webpage, Washington, DC, www.sustainablecommunities.gov/mission/about-us(accessed 15 July 2016).
- US White House(n.d. a), "Office of Urban Affairs", White House webpage, Washington, DC,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urbanaffairs>(accessed 24 June 2016).
- US White House (n.d. b), "Office of Urban Affairs: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White House webpage, Washington, DC,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administration/eop/oua/initiatives/neighborhood-revitalization>(accessed 18 July 2016).
- US White House (2011), "Announcing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11 July 2011, White House webpage, Washington, DC,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1/07/11/announcing-strong-cities-strong-communities>(accessed 24 June 2016).
- US White House (2009), "The White Hous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White House webpage, Washington, DC,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administration/eop/oua/initiatives/neighborhood-revitalization>(accessed 18 July 2016).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는 각국 정부가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독특한 포럼이다. OECD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및 노령화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실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각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도록 조력하는 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모범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및 국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행 OECD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이다. 유럽연합은 OECD의 임무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OECD는 간행물을 통해 회원국간에 합의된 조약, 지침 및 기준은 물론 자체 통계자료와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정책

도시는 국가의 경제, 사회 및 환경 관련 임무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국가도시정책(NUP)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및 국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시화의 동력을 이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3차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 대비하여 작성된 본 보고서는 35개 OECD 회원국 NUP의 실행 실태와 범위에 대한 평가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도시정책의 발전사와 국가 정치의제에서 도시정책의 역할의 발전사를 기술한다.

본 간행물은 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위한 준비자료로 작성되었으며 기존의 유엔인간정주계획(UN Habitat)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엔인간정주계획과 OECD는 새로운 도시의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도시정책에 관한 정책유닛3을 공동으로 주도함에 따라 본 보고서를 구상하였다.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는 유엔인간정주계획과 OECD가 공동으로 작성한 세계 국가도시정책 보고서와 함께 국가도시정책의 국제 모니터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원 본 발행처 : OECD

번역본 발행처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9층

연 락 처 : 02-3702-7133~4

홈 페이지 : <http://www.oecdkorea.org>

번 역 업 체 : (주) 이코런스

번 역 검 수 : 최준우

※이 책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희 본부 디지털 아카이브(<http://public.oecdkorea.org/>)에서 eBook으로 확인 가능합니다